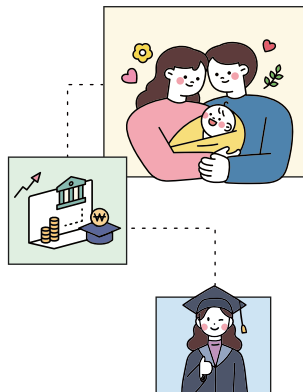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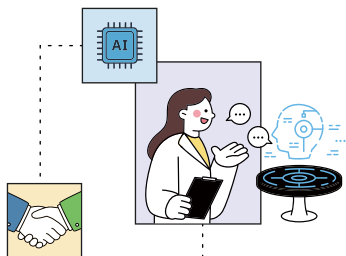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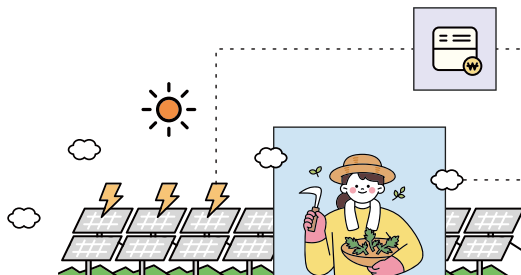




대한민국 국가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 Contents

I 발간사 및 인사말

1. 발간사

- 정청래 당대표 014

2. 인사말

- 한정애 정책위의장 016
- 이재영 민주연구원장 017

II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00개 공약

1. 지방 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

- 1)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 021
 - 5극3특 완성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겠습니다 022
 -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023
 -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방자치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024
 -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025
 -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026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및 자치경찰제 시행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 강화 및 경찰권력 통제를 달성하겠습니다 027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해 통합적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028
 -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농림수산물분야 예산을 확대하며, 자치분권형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029
 -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여성·전문인력·공동영농조직 등 미래농업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030
 - 이통장의 노고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031

2) 지방 핵심산업 육성 032

- 메가특구 지정 등으로 5극3특을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겠습니다 033
-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혁신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034
- 균형성장의 거점으로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035
- 벤처·스타트업을 지역의 성장엔진으로 만들겠습니다 036
-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방주도 성장의 경제구조를 만들겠습니다 037
- 지역주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습니다 038
- 지역 R&D자율성 강화로 지역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039
- 지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040
- 생활권 중심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041
- 관광자원의 다각화로 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042
- 기후 농정으로 식량자급 확대하고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겠습니다 043
- 수산업 육성 등을 통해 어민 소득을 증진하겠습니다 044
- 어촌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해양관광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045
- 국유재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046

3) 지방 기반시설 확충·정주여건 개선 047

- 5극3특 등 권역별 성장 지원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048
- 수도권은 더 빠르게! 전국은 더 가깝게! 전국에 균형잡힌 교통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049
- K-관광의 거점, 지방공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050
- 내가 사는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051
- 전국 곳곳 빠짐없이 충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052
- 맞춤형 주치의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053
-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습니다 054
- 농촌재생프로젝트로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삶터·일터·쉼터로 만들겠습니다 055
- 섬주민의 안전한 교통권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056

2. AI 등 신산업성장·경제대도약

1)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신산업 육성 057

-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고속도로'를 완성하겠습니다 058
- 초격차 AI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059
- 지역·산업, AI를 만나 'AX(AI대전환) 대도약'을 시작합니다 060
- 국민의 보편적 권리와 삶의 질을 바꾸는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061
- 사람 중심의 AI 미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062
- 교육혁신으로 AI 인재양성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063
- AI가 주도하는 K-AI시티,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064
-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혁신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065
- K-컬처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066
- 국가유산 보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067
- K-방산수출 육성 및 획득관리체계 개편으로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068
- 북극항로 거점 항만 특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069
- 녹색해운항로 구축으로 글로벌 친환경 규제에 따른 탄소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070
- 스마트 농업 확산,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을 미래농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071
- K-푸드 수산식품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여 수산물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072
- 첨단전략산업 혁신으로 미래 성장기반과 경제안보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073

2) 산업경쟁력 강화·성장기반 구축 074

- 국가대전환 성장을 주도할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075

-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076
-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077
- 세계시장을 선도할 미래전략기술 육성에 매진하겠습니다 078
- 제조 AX으로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079
- 수출통상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080
- 규제는 풀고 성장은 밀고,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081
-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겠습니다 082
-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실용경제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083
- 지역경제의 근간인 건설경기를 회복하겠습니다 084
- 적극적 재정운용을 지원하여 잠재성장률을 높이겠습니다 085
- 적극적으로 국부를 창출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086
- 공공기관 경영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087
- ESG 경영 지원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088

3) RE100·기후위기 대응 089

-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090
- AI 기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지도를 만들겠습니다 091
- 실효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저탄소·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092
- K-GX(대한민국 녹색대전환)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겠습니다 093
- 탄소중립 산업대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094
- 청정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믹스와 전력시장 혁신으로 에너지 안보와 미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095
-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기후보험 3종 세트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096
- 햇빛소득마을 조성, 농어촌 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농어촌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겠습니다 097
- 송전망 경과지역 지원 확대와 햇빛소득마을 제도화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전력망을 구축하겠습니다 098
- RE100 산업단지 확산으로 국가균형발전과 RE100을 실현하겠습니다 099
- 분산에너지 특구와 RE100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산지소 기반 전력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100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홍수·가뭄·수원 다변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01
- 탄소저감을 위해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경유버스를 '수요응답형 전기버스'로 전환하겠습니다 102

• 탄소중립 실현과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지역 맞춤형 탈플라스틱 대책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종량제봉투 직매입 대책을 지원하겠습니다	103
• 국립공원, 습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방마다 다양한 탄소흡수원을 조성하겠습니다	104
• 탄소중립시대,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구조개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5
• 친환경·유기농업을 두 배로 확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농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106
• 임업·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산업이자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07
• 해양오염 분포 대응 및 수거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청정한 우리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108

3. 기회보장·국민성공

1) 청년밀착지원·국민자산형성	109
•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여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110
•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습니다	111
•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112
•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겠습니다	113
•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114
• 미래를 위한 투자,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하겠습니다	115
• 청년 밀착 지원으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116
• 1인가구, 청년을 위한 주택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118
•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 첫 출발과 정착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119
2) 가계생활비 경감 지원	120
• 전국 어디서나 적용되는 모두의 카드(K-패스)로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121
• 에너지가격등·고물가·고환율로 인한 가계지출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122
• 청년·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및 농식품바우처 확대 등 식생활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123
•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로 배움에서 소외되는 아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24
• 교육 가격 품목별 상한가 설정으로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125
•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일상 속의 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126
• 생활스포츠 활성화로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겠습니다	127
•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함께 이루는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28
3) 창업·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129
•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겠습니다	130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131

• 지역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겠습니다	132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133
• AI 등 혁신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4
• 일자리 창출의 중심을 창업으로 전환하여 국가 창업시대를 열겠습니다	135
• 연간 40조원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을 만들겠습니다	136
•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제값 받는 공정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137
• 격차 해소와 상생으로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겠습니다	138
•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과 수출증대로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하겠습니다	139
• R&D와 AI 제조 혁신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40

4. 민생안정·공정사회

1) 촘촘한 국민생활 안정 지원	141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42
• 공공과 민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43
•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정, 차질 없는 공급으로 해결하겠습니다	144
• 서민 물리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145
•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46
• 청소년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47
• 쌀값 정상화·농산물 유통 개혁·공익직불금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148
• 선진국형 농가소득망 및 농업재해 안전망을 도입하겠습니다	149
•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및 공공비축농지를 확대하여 영농 세대교체를 이루겠습니다	150
• 어업구조 혁신을 통해 어업생산성을 확대하겠습니다	151
• 암 치료 경험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152
•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동네 한의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3
• 모두가 행복한 배달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154
• 믿을 수 있는 상조시장을 만들겠습니다	155
• 체육시설업의 예기치 못한 폐업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156
• 문화예술의 창작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57
• 전문체육인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58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59
2) 아동·어르신 등 돌봄지원·저출생고령화 대응	160
•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1
• 국가가 책임지는 지방정부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을 추진하겠습니다	162
•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교육의 질은 높이겠습니다	163

• 무너지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 건강, 국가가 책임지고 지킵겠습니다	164
• 학부모의 교육 참여 강화로 교육 공동체성과 교육자치를 강화하겠습니다 ..	165
•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166
• 다자녀가구 가사지원서비스 바우처를 도입하여 가사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168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169
•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역 사회통합돌봄체계를 만들겠습니다	170
• 어르신·장애인 등의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해결하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확충하겠습니다	171
• 저출생·고령화 사회, 신혼부부와 어르신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172
• 돌봄 개인예산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173
• 기능 전환을 통해 경영난에 처한 복지시설의 활로를 모색하고 부족한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174
3) 노동·권리보장·공정사회 확립	175
• AI·자동화 및 산업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176
• 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을 제도화하고 생활임금을 확산하여 '노동 존중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177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역산업안전보건체계를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감축 하겠습니다	178
•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노후소득 보장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179
•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일터 권리'를 보장해,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를 만들 겠습니다	180
•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181
•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182
•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고 채무자 보호체계를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183
• 권리보장 강화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확립 하겠습니다	184
• 개인정보 보호 강국이 되겠습니다	186
• 통합·특수교육 강화로 모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187
• 누구나 차별 없는 '전 국민 미디어 향유권'을 보장하겠습니다	188
• 안전한 디지털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189
•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 부담을 키우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리베 이트를 근절하겠습니다	190
• 기술탈취를 근절하여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191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물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2
• 100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93

5. 국가정상화·국민주권회복

1) 국가정상화·국민주권 실현	194
• 민주화 이후 39년, 성숙한 민주주의에 걸맞도록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195
• 주민소환제 요건 개선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로 책임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196
• 국회의 자체 경비능력을 갖추고 국민대표의 윤리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97
• 법조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짓겠습니다	198
• 차질 없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199
•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법제도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200
•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201
• 사회적 갈등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202
• 재정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국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03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고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4
•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
• 민주시민·경제금융·노동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6
• 정치를 넘어 국민의 품으로, '미디어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207
•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하겠습니다	208
2) 여성 등 국민안전 강화	209
•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재난관리법」 제정을 통해 재난에 대한 국가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210
• 재난 예방·대응 강화를 통해 주민안전을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211
• 모두가 누리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12
•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13
• 대한민국을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214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215
• '응급실 뺑뺑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16
• 환자와 필수의료 모두를 살리는 의료사고 상생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17
•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18
•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통합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19
•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금융범죄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220
•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안심 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221
•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 주도 배상을 추진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22
•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3
• 지방하천·저수지·소규모댐의 수질관리를 강화를 통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고, 수생태계도 보호하겠습니다	224
• 양육비 이행강화와 선지급제도 안착을 통해 돌봄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225

3) 한반도평화	226
•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를 증진하겠습니다	227
•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추구하겠습니다	228
• 평화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229
• 국제사회 기여와 책임외교를 통한 G7+ 외교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230
• 700만 재외동포의 안전한 해외체류를 보장하고 영사 서비스를 국민 중심으로 혁신하겠습니다	231
•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겠습니다	232
• 비무장지대(DMZ)를 국제 생태·평화 관광 협력지구로 개발하겠습니다	233
• 지역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플러스 센터를 전국 7개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34
•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35
•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임무에만 전념하는 군을 만들겠습니다	236
•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237
• 곳곳에 산재된 현충시설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38

6. 장애인	257
7. 직장인	260
8. 소상공인·자영업자	262
9. 중소벤처기업	264
10. 농어업인	267
11. 동물반려인	270
12. 투자자	271
13. 군인	272

III 5대 전환

1. 지방 주도 성장	241
2. 모두의 성장	243
3. 안전에 기반한 성장	244
4. 문화가 이끄는 성장	245
5.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246

IV 대상별 공약

1. 아동·청소년	248
2. 청년	250
3. 중장년	253
4. 어르신	254
5. 여성	256

I 발간사 및 인사말

1. 발간사

· 정청래 당대표

2. 인사말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이재영 민주연구원장

발간사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정치, 국민의 내일을 준비하는 정책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지난해 6월 3일,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 한번 역사를 바꿨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이 할퀴고 간 상처를 뒤로하고, 회복과 정상화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국민주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2,500선에서 3배 이상 가파르게 상승해 8,000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 역시 세계 13위에서 6위로 단숨에 뛰어올랐습니다. 우리 경제가 제대로 평가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출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7천 억 달러를 달성했고,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1.7%로 주요 22개국 중 당당히 1위를 기록했습니다. 어려운 세계 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성장과 혁신의 가능성을 다시 증명하며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는 6월 3일은 지방정부의 역사를 바꿀 차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 정상화를 통해 안정된 경제성장 기반을 만들고, 국토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국민께서 선택해 주신 변화와 개혁의 방향을 지역 곳곳에서 완성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반성 없는 내란 세력을 단호히 심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앙정부의 성공을 지방으로 확장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일 잘하는 중앙정부 곁에, 유능한 민주당 지방정부가 함께할 때 대한민국은 착착 손발을 맞춰 골고루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5대 비전과 15대 정책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실천하여 골목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국민 여러분이 매일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도 미리미리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 전략과 AI 등 신산업 육성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대도약을 이루겠습니다. 누구나 성공할 기회를 보장하고 성장의 과실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국민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국가 정상화와 국민주권 회복을 완수해 민주주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올해 국민주권정부가 제시한 5대 전환의 비전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200개 생활밀착형 공약 속에 충실히 담았습니다. '메가특구 지정', '기후보험 도입',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햇빛소득 마을 확대', '지원주택 확대' 등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정치, 국민의 내일을 준비하는 정책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을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중앙정부와 유능한 지방정부가 강력한 원팀이 되어, 이를 현실로 증명해 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정 청 래





인사말

대한민국은 정상화를 넘어
새로운 도약과 대전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정책위의장 한정애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내란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정상화의 궤도로 돌려세우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회복·성장·행복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에서 대한민국은 다시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상 처음 8천 선의 고지를 밟았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세계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경상수지 흑자는 10년 만에 일본을 앞질렀고, 관리재정수지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나라 살림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1여년 만에 윤석열 정권에서 고착화된 0%대 저성장을 끌어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정상외교와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한미 관세협상의 성과, 윤석열 정권에서 추락했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지수도 회복하며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상화를 넘어 새로운 도약과 대전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 'AI 등 신산업성장·경제 대도약', '기회보장·국민성공', '민생안정·공정사회', '국가 정상화·국민주권 회복'이라는 5대 비전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탈피하고 5극3특을 완성해 지역의 고른 성장을 견인하고,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해 미래 성장의 토대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생활비 부담 경감, 자산 형성 지원,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구축,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국민의 안정적 삶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야말로 일 잘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공약집에 담은 약속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한정애

한정애

인사말

이제는 익숙한 방식을 넘어,
변화의 흐름을 바탕으로 성장의
틀을 바꿔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일잘하는 지방정부 정책본부장, 민주연구원장 이재영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의 퇴행과 혼란을 딛고 국가의 기본과 국민의 삶을 다시 세워야 하는 엄중한 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최근 국민들께서 보여주고 계신 기대와 평가는 유능하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치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평가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성장 둔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수도권 집중,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이 겹쳐지는 구조적 전환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방식을 넘어, 변화의 흐름을 바탕으로 성장의 틀을 바꿔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지역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권력의 교체를 넘어, 국가적 전환을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가야 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지역에서도 지속되고, 삶의 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이에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살리기 위한 실천적 약속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AI 등 신산업 중심의 경제 대도약, 국민 누구나 기회를 누리는 사회, 민생안정과 공정한 공동체, 국가 정상화와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5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의 방향을 발전적으로 확장해 정책 공약으로 담아낸 것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철박함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5극3특을 축으로 지역이 산업과 인구, 혁신을 함께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성장의 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변화와 성과가 지역의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완성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이 성장의 주체가 되고, 그 결실이 전국 곳곳 국민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삶의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삶 앞에 더욱 겸손하게,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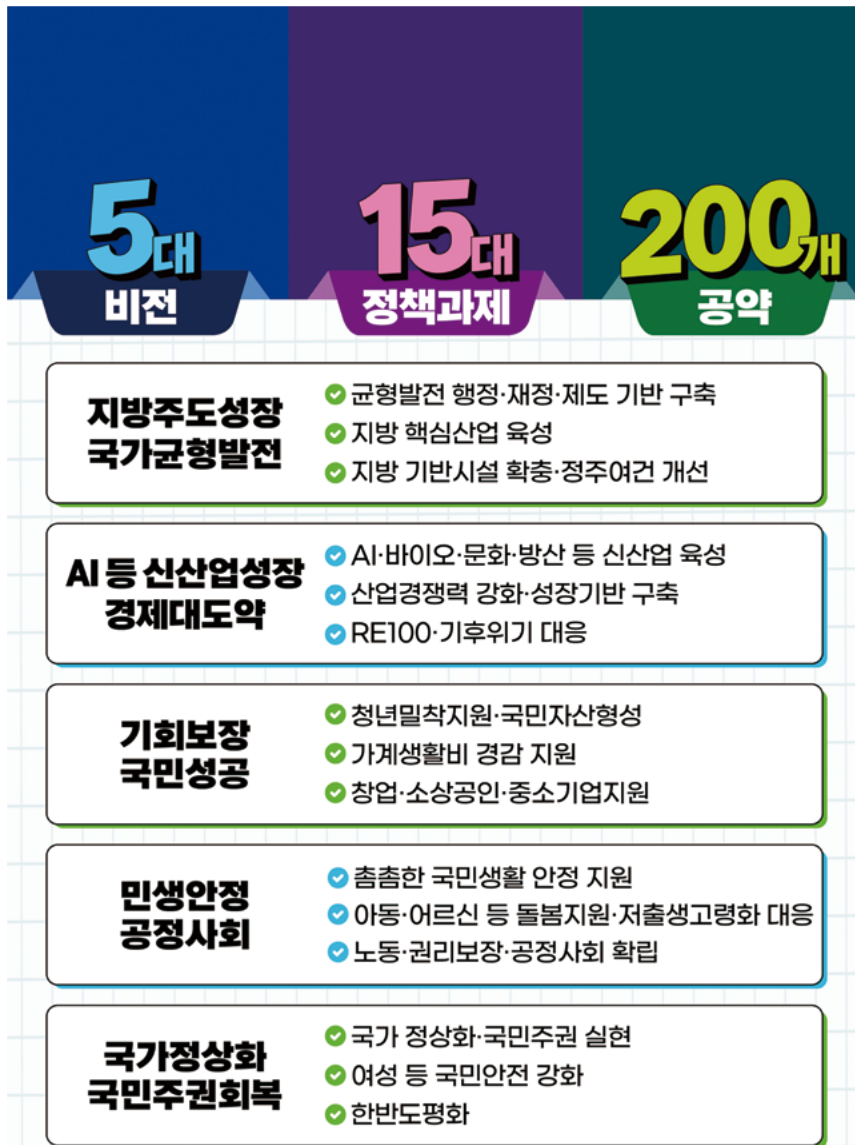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이재영

이재영

II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00개 공약

1. 지방 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
2. AI 등 신산업성장·경제대도약
3. 기회보장·국민성공
4. 민생안정·공정사회
5. 국가정상화·국민주권회복



II.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00개 공약

1. 지방 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

1)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

2) 지방 핵심산업 육성

3) 지방 기반시설 확충·정주여건 개선

1)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

01

5극3특 완성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겠습니다

■ 5극 완성을 위한 행정통합 및 특례 발굴 추진

- 전라남도·광주 등 통합 이외에도 다양한 광역 지방정부 통합을 통해 5극체제 완성
- 행정통합에 따른 특례 추가발굴 및 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통합특별시 경쟁력 확보

■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례지원 지속 추진

-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SOC인프라 구축 등 특화성장지역 조성·지원

1)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

02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 광역시·도 간 통합뿐만 아니라 시·군·구 통합 등 다양한 지방정부 통합방안 마련

- 주민의사를 반영한 지역 주도 통합안 마련 및 중앙정부 인센티브(특례) 제공

■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비수도권 거점 특례시 지정

- 인구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지방 거점 특례시를 선정하여 권역성장 견인

■ 읍면동 체제개편 및 유연화 등을 통해 인구구조에 맞는 하부행정기구 효율화

■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정비

1)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

03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방자치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교부세율 상향,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세입 확충 강화 등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 5극3특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 재정지원 방안 추진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성과 집행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편 및 기금규모 확대
- 고향사랑기부제 법인기부 도입 및 법인 기부금 활용방안 마련
 - 2,000만원 한도에서 법인 기부를 허용하고, 법인 기부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활용
 - 법인기부 사업의 지출현황 및 평가결과 공개하여 투명성 확보
- 지방정부 여건에 맞는 지역화폐 용처 다양화 및 보조율 확대
 -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화폐 사용처를 구분하고 매출규모 등 조정
 - 인구감소지역 등에 지역화폐 보조율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정부 권한이양 확대(「지방이양일괄법」 추진)에 따른 재정 권한 강화
-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 확대 및 보조사업별 특성 등을 반영해 국가 - 지방 역할 조정

1)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

04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주민자치회 입법화 및 제도 안착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마을행사 개최, 위탁사무 수행 등 적극적인 자치사무 수행
- 주민 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 및 주민자치 종합계획 마련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 마련

1)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

05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책임감 있는 지방자치제도 구현
 - 지방의회 조직·운영 등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 역량·책임성 강화
-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증원 및 교육 강화

1)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

06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및 자치경찰제 시행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 강화 및 경찰권력 통제를 달성하겠습니다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 위원회 법적지위 강화 및 심의·의결 대상 확대, 법안심사 등을 위한 지원사무기구 운영
- 지역주민의 안전수요에 부합하도록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실질적 정착 지원
 -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를 통합행정시 등에 단계적 이관
 - 범정부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세부방안 협의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

1)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

07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해 통합적 생태계 조성 and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제도 안착을 통한 사회연대 통합생태계 구축
 - 민관협력체계 마련, 사회연대기업에 대한 행·재정지원, 사회연대금융, 교육·훈련 등
 -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통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지역경제 육성
-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재정 부담 완화방안 마련
 -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구성원 삶의 질 향상
 - 효과적 지원체계 수립을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대규모 재정 부담 완화

1)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

08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농림수산물식품분야 예산을 확대하며, 자치분권형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사회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단계적 시행
 -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을 소멸위기지역부터 지역화폐로 단계적 지급
 - 농어촌을 국민의 일터·삶터·쉼터로 혁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농림수산물식품분야 예산 확대
 - 식량안보 국가전략산업, 국가균형발전 등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 제고
- 자치분권형 농정 추진
 - (농정분권종합계획) 국가의 지방분권 흐름에 발맞춰 농정분권종합계획 수립
 - (계획협약) 중앙정부는 아젠다를 제시하고 실천방안은 지방정부가 발굴하는 중기계획 체제를 구축, 중앙-지방정부 계획협약제도 도입, 지방정부 자율편성농정 사업 확대
 - (농어업회의소) 농어민 참여 지역농정거버넌스 제도화를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1)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

09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여성·전문인력·공동영농조직 등 미래농업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공동영농조직 육성, 농업법인 취업 지원제도 도입 등으로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
 - 외국인 계절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숙소 건립 등)을 통한 안정적 노동력 공급
 - 공동영농조직 육성 및 지원
 -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의 취업지원
-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제도 개선
 - 청년농업인 예비농업인제도 및 연수제 도입, 창업농·겸업농·고용농 맞춤형 지원
 -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지위 인정,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 등
- 스마트농업, 재생에너지, 경영지원, 지역리더 등 지역기반 인재 양성

1)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

10

이통장의 노고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통장 수당에 대한 국비보조
- 재난현장 일선에서 희생하는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국가지원

II.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00개 공약

1. 지방 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

1)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

2) 지방 핵심산업 육성

3) 지방 기반시설 확충·정주여건 개선

2) 지방 핵심산업 육성

01

메가특구 지정 등으로 5극3특을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및 지역맞춤형 지원 강화

- 5극3특 권역별로 핵심산업을 선정하고, 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 등 정책 패키지 집중 지원
- 5극3특 권역별 연결을 통해 첨단산업 벨트를 조성하는 한편, 지역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특화 지원

■ 5극3특과 연계, 광역·초광역단위 핵심 전략산업중심 메가특구 지정으로 성장거점 조성

- (규제특례) ①규제특례를 미리 준비된 형태로 제공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②기업 요청 시 규제를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 (정책지원)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등 7대 분야중심 전폭적 지원
- (제도정비)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메가특구를 신속히 지정

■ 지역투자자와 고용을 이끄는 지역대표 중견앵커기업 발굴 육성

- 중견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중소→중견→글로벌전문기업)을 위해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강소·중견기업의 맞춤형 지원 확대
- 중견 앵커기업과 지역 내 중소기업의 공동 R&D, 해외마케팅 지원 등으로 지역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핵심기업으로 육성

2) 지방 핵심산업 육성

02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혁신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규모와 한도를 대폭 확대하여 지방투자 유인을 강화
- 「지방투자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기업·근로자에 대한 세제 및 인센티브 제공, 기회발전특구 내 정주여건 개선 등 추진

■ 지역거점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 노후산단 환경 개선과 구조고도화로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조성
- 스마트 그린산단 추가 지정 및 스마트 그린산단과 주변도시를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 일과 삶이 공존하는 복합산업공간으로 조성 추진

■ 청년이 머물고 싶은 문화·융합형 산업단지 조성 및 활력 제고

- 문화·체육 등 쾌적한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친화형 문화융합 선도산단 확대
- 산단 교통환경 인프라 확충 및 교통비 지원 등으로 접근성 개선
-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을 통한 예비청년창업자의 창업공간 확충

2) 지방 핵심산업 육성

03

균형성장의 거점으로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 차질 없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전계획 수립
- 이전 도시 내 연구개발(R&D)캠퍼스 유치 및 규제특구 확대 지원
- 지역대학과 공공기관 간 공동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 청사 임차·공동청사 건설 등을 통해 '27년부터 신속하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이전기관 종사자 조기 정착을 위해 교통·교육·의료·정주 패키지 지원

2) 지방 핵심산업 육성

04

벤처·스타트업을 지역의 성장엔진으로 만들겠습니다

- 기술혁신 인재·지역 성장동력 산업을 토대로 '창업도시'를 선정하여 창업생태계 확충
- 지역 유니콘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지역성장펀드' 조성하고, 일반 모태자펀드의 지역투자 의무 비율 도입
- 비수도권 엔젤투자허브 구축 확대 등을 통해 지역 혁신 스타트업 투자 확대
- 지역의 관광·문화 자원 등을 활용한 로컬 창업 기업을 발굴 육성

2) 지방 핵심산업 육성

05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방주도 성장의 경제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수도권 중소기업 지방 이전 시 조세지원의 범위를 재직자까지 확대
- 이전 중소기업 재직자 소득세 감면 신설 추진
- 지역 주력산업 기반 중소기업이 선도기업으로 성장 지원하는 법적 기반 마련
- 민간투자 연계 틈스 방식 R&D 등 중소기업 R&D의 비수도권 지원 확대
- 지역 유희공간을 활용, 교육, 공유오피스,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로컬 창업 타운 구축
- 창업기업 혁신 성장을 위해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 특구 신설 추진

2) 지방 핵심산업 육성

06

지역주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주도의 지역맞춤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칭)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운영방식 개선 등 중앙이 지원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도화
-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성과공시제로 강화, 성과에 따른 지원예산 차등화

■ 지역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역 사회적 대화와 거버넌스 혁신

- 시민(비정규직·자영업자·청년·장년·여성 등) 참여형 '풀뿌리 사회적 대화' 확산
- '지역고용노동심의회'로 확대·개편(사무국 운영)하여 실행형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 ('풀뿌리 사회적 대화'와 결합)

■ 지역맞춤형 청년고용정책 추진

-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에 구직자 면접 시 면접수당 지급 의무화 및 민간 기업 확산
-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구직자 채용 시, 구직기관이 신체검사비용 부담 의무화
- 지방정부 청년수당 도입 전국적으로 확대

2) 지방 핵심산업 육성

07

지역 R&D자율성 강화로 지역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 중앙주도 자원배분 및 시도 단위 단절적 지원을 '5극3특'별 자율책임 기반 방식 전략으로 전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 지역 R&D 관련 조정 역할 부여

■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기반한 지역별 특성화된 R&D에 집중투자하는 '지역자율 R&D 예산' 단계적 대폭 확대

■ 지역 R&D에 대한 재정적 지원현황을 사업별 지역별로 분석 관리하여 정책에 환류하는 체계 마련

■ 지역 수요와 연계한 인재 활용 및 정착 정책 마련

- 지역 산업구조와 기술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지역 대학과 기업, 연구소가 협력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연구기반과 환경이 열악한 지역 대학의 석박사에 대해 충분한 연구비와 연구생활 장려금에 더해 장학금 지원 확대를 통한 연구경쟁력 제고

2) 지방 핵심산업 육성

08

지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화하여 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공장·본사를 인구감소, 성장축진,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세액감면 기간 확대(7~12 → 8~15년, '26년부터)
 - 특별지원지역 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
- 통합 시도 내 지역발전 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최고 수준의 조세지원 제공

2) 지방 핵심산업 육성

09

생활권 중심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생활권 20분 내 문화시설접근권 보장
 - 구·읍면동 단위의 공공 문화거점(생활문화센터, 공공전시공간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
 - 주민센터·도서관·체육시설의 복합문화공간 전환 지원
- 지역의 생활문화동아리(문화형 생활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 동아리의 도약·안착·유지 등 단계별 지원
 - 생활문화모임 발표 지원 및 생활문화축제 개최
- 문화형 도시(마을) 재생에 공용 문화시설 건립 지원
 - 중소도시 문화브랜드화 지원
 - 거점형 국립 문화시설 지역 확대

2) 지방 핵심산업 육성

10

관광자원의 다각화로 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 미식·한류·축제·해양 및 섬·산림 등 지역대표 관광상품 브랜드화 지원
- 워케이션 관광 활성화 지원 및 관광객을 위한 교통·숙박 편의성 제고

■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관광산업 규제 합리화 및 관광특구 조성
-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확대 및 외래관광객 불편사항 개선 지원

■ 국민 관광향유권 확대

- 근로자 휴가 지원 확대 및 지역사랑 휴가 지원
- 지역관광 정보서비스 고도화 및 세대별 맞춤형 관광 지원

2) 지방 핵심산업 육성

11

기후 농정으로 식량자급 확대하고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겠습니다

■ 「식량안보법」 제정으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식량자급률 제고, 국가 먹거리 전략 수립, 식량위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

■ 기후적응형 농업으로 안정적 농산물 공급

- 품종개발, AI 관측·재해예측 고도화, 스마트 정밀농업 확산 등
- '기후취약 품목' 지정, 계약재배 비중 확대 및 이행지원제 도입, 비축역량 강화, 글로벌 공급처 다양화 등

■ 지역푸드플랜 및 로컬푸드 활성화

- 지역 내 건강한 먹거리 보장 및 순환, 농촌지역 식품사막 문제 해소

2) 지방 핵심산업 육성

12

수산업 육성 등을 통해
어민 소득을 증진하겠습니다

■ 전국 단위 콜드체인 기반 수산물 공급망 구축

-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저온운송차량 등 위생안전 물류지원, 유통센터(산지거점 유통센터 FPC, 소비지분산물류센터 FDC) 확충
- 노후 위판장을 저온·친환경시설로 현대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식산업 육성

- 외해 신규 양식적지 발굴 및 스마트 양식 혁신 선도지구 육성
- 기후변화, 어장환경 등을 고려한 지역별 양식품종 특화 및 양식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중간양식 확산 추진

■ 청년어업인 인력창출을 위한 진입 지원 확대

- 어촌 정착자금 지원 확대
- 유희어선 매입으로 청년 대상 어선임대 확대 및 어구구입비 지원 등 역량강화 (어선어업교육, 멘토링, 보험료 지원 등)

2) 지방 핵심산업 육성

13

어촌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해양관광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확대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대상지 추가선정 및 지원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에 따른 국내 해양레저관광의 글로벌 브랜드 육성, 해양 레저 축제, 국제 대회 유치를 통한 해양관광 거점 개발 등 정부지원 및 비전 창출 추진

■ 관광객 등 휴식·체류 공간 제공 및 지역 해양관광자원과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공공 해양관광인프라 조성 지원

- 동·서·남 권역별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확대 구축, 마리나 거점 및 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

■ 어촌문화·관광인프라를 활용한 '체험형 어촌 위케이션 빌리지'를 조성하여
도시민들에게 일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 제공

- 유희시설 활용·관광자원 연계 등을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어촌 대상으로 시범 조성

국유재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지방정부의 국유재산 활용 사업 신속 추진 지원

- 지방정부의 현안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 정부 간 역할 개선

■ 유휴 국유재산의 지역주민 무상 개방 허용

- 지역주민의 개방 요청이 있는 유휴 국유재산은 무상으로 개방
* 특정인의 배타적 이용이나 SOC 시설 설치 등은 제외

■ 소액 사용료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

- 연간 사용료 납부액이 소액인 국유재산은 사용료 면제

II.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00개 공약

1. 지방 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

1)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

2) 지방 핵심산업 육성

3) 지방 기반시설 확충·정주여건 개선

01

5극3특 등 권역별 성장 지원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 5극3특 균형발전을 위한 (가칭) 「광역권 개발 특별법」 제정 등 지원 방안 마련

- 지방권 광역급행철도역 고밀개발 및 기업본사 이전 유도 위한 규제 완화
 - 법인세 감면 확대, 직원 주택 우선공급 등 통해 기업본사 이전 유도
 - 자족기능을 갖춘 지방 성장거점 육성(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등)

■ 지역별 도시경쟁력 확보 위해 도시별 랜드마크 활성화 방안 도입

- 도시 내 특색 살린 거점별 랜드마크 활성화 위한 '도시 규제특례 적용'으로 도시경쟁력 확보
- 한국형 화이트존(White-Zone) 활성화 통해 지방의 자율적 도시개발 지원

■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 신도시 건설

- 1기신도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교통이 편리한 2기신도시 건설, 자족기능을 갖춘 3기신도시 건설

■ 인구소멸위기 지역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

-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 확대, 신규 지표를 반영한 유연한 지정방식 도입
- 인구감소지역 내 법인세, 소득세 감면 확대 검토 등 유인책 마련
-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국비 지원

■ 폐철도부지를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친화공간, 문화·교육·관광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활성화 방안 마련

02

수도권은 더 빠르게! 전국은 더 가깝게! 전국에 균형잡힌 교통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 철도지하화·지하고속도로 선도사업 차질 없이 추진

-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및 단계적 추진, 선도사업 대상지 확대

■ 전국 광역철도 확충 및 메가시티 지원을 위해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 수도권 외곽지역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GTX 건설사업 차질 없이 추진

■ 철도·고속도로망 구축 전국 거점 연결, 전국 고속철도 수혜면적 대폭 (현재 39%) 확대

■ 지방 항공관문 확대 및 신공항 사업 추진, 국제선 LCC 운항 등 네트워크 확대

■ 대도시 내 도시철도 및 간선급행버스체계(BRT)·광역버스 확대 통해 대도시권 교통 혼잡 완화

■ 원하는 시간·장소에 이용 가능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확대 통해 농·어촌 등 교통 소외지역문제 해소

■ 고속열차 예매전쟁 해소

- 평택오송 2복선화 차질 없는 마무리로 병목구간 해소
- 신규 열차 '청룡(EMU-320)'의 차질 없는 도입으로 공급좌석 확대
-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으로 고속철도 운행횟수 증차

■ 철도차량 납품 상습 지연·선금 목적 외 사용 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납품 지연 방지

3) 지방 기반시설 확충·정주여건 개선

03

K-관광의 거점, 지방공항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K-컬처로 증가하는 외국인의 지방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중국·일본 등 방한 외국인 상위국가 항공노선의 지방취항 유도
- 한국관광공사 등과 협력, 지방공항으로 연결탑승 시 항공권 할인 등 국제선-국내선 프로모션 추진
- 지방공항 슬롯 추가확보 및 터미널 주차장 등 여객인프라 확충
-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과 협력 통해 외국인 여행객 소비행태 분석으로 맞춤형 프로모션 시행
- 지방정부의 지방공항 투자 및 운영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3) 지방 기반시설 확충·정주여건 개선

04

내가 사는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필수의료 지방분권화) 지역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필수의료체계 구축
 - 지역 특성과 의료수요를 반영해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를 중심으로, 거점병원 확충·의료인력 배치 등 필수의료 핵심 정책을 지역이 직접 결정
 -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활용해, 소아·분만·응급 등 우리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
- (공공병원 확충)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 큰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진료권)에 공공병원 확충
 - 국립대학병원의 시설·설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 필수의료·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익적 민간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 '소아·분만 24시간 지역 책임체계' 구축
 - 달빛어린이병원·소아긴급센터·소아응급센터 협력을 통한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 협력체계 구축
 - 내가 사는 곳 중심, 24시간 분만 센터 지정 강화

3) 지방 기반시설 확충·정주여건 개선

05

전국 곳곳 빠짐없이 충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지역 간 의료 인력 격차가 없도록 의사가 부족한 곳에 필요한 만큼 의료 인력 양성
 -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 신설
- 유능한 지역 의사 배출로 지역의료의 질 향상
 -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지역 의사제 도입으로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
 - 지역 내 의료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및 교육·수련 환경 개선
- 보건의료 전문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 강화 및 적정 인력 확보
 -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한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범위 합리적 설정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인력 기준과 지원체계 마련

3) 지방 기반시설 확충·정주여건 개선

06

맞춤형 주치의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지역맞춤형 우리 동네 일차의료체계 확립
 - 환자·질환·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치의제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격차 완화
 - 맞춤형 주치의제 활성화를 위한 별도 보상체계 마련 및 수가 현실화
- 전국 어디서나 사는 곳에서 누리는 방문재택 진료
 - 재택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기관과 방문요양·방문간호·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 지정 및 운영 확대
 - 재활, 영양, 구강, 약료, 한방 등 특화된 진료과목 추가 및 서비스 다양화 추진

3) 지방 기반시설 확충·정주여건 개선

07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습니다

■ 행정수도 '세종' 완성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전국 접근성 개선 서울 1시간, 전국(주요 도시) 2시간 접근 가능한 교통망 구축

-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건설, 광역 BRT 개통, 충청권 광역도로망 구축
-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 추진, BRT-CTX 등 세종-청주국제공항 연결 강화

■ 자족기능 확충 AI·모빌리티·바이오 등 미래산업 기업혁신허브 조성

-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추진

3) 지방 기반시설 확충·정주여건 개선

08

농촌재생프로젝트로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삶터·일터·쉼터로 만들겠습니다

■ 의료, 돌봄, 생활, 문화, 교통 등 필수 서비스 제공으로 따뜻한 복지 구현

- 읍면 거점에 농촌형 생활 SOC 복합센터 확충
-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확대,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주체 육성, 수요응답형 농촌교통 모델 확산 등

■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확대, 세컨드하우스 및 귀농·귀촌 지원 강화로 워라밸 실현

- 「농촌빈집정비법」을 제정하여 농촌빈집을 마을호텔·카페·청년주택·체험주택 등으로 활용
- 농촌 체류형 쉼터,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확대
- 귀농·귀촌 임대주택 건설, 귀농·귀촌 지원예산 확대

■ 농촌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쾌적한 농촌 조성

섬주민의 안전한 교통권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행 민간위탁 운영 체제 방식에서 공공기관이 책임 운영하는 공공위탁(공영제) 추진**

- 재정 효율(선사 보장 이윤 순감, 규모의 경제 실현 등), 안전 개선(선박 수리품질 향상, 육상 지원체계 구축 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여객선 공영제 도입

■ **섬 관광객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일반인들의 섬 관광객 여객운임 반값 운영제 지원 추진

■ **연안여객 안전을 위한 해상 전기차 화재 사전 방지, '연안여객선 소화설비' 예산 확대**

- 여객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 확보와 전기차 화재 확산 지연에 필요한 화재 진압장비 및 소화장비 도입 및 설치

II.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00개 공약

2. AI 등 신산업성장·경제대도약

1)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신산업 육성

2) 산업경쟁력 강화·성장기반 구축

3) RE100·기후위기 대응

01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고속도로’를 완성하겠습니다

- 세계적인 AI 역량 확보를 위해 산학연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GPU 조기 확보
- 데이터센터의 적시 구축을 위해 「AI 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 제정
 -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타임아웃제 도입, 입지·시설 특례 허용 등 AI 데이터센터 구축 촉진
- 미래 AI의 연결과 확산을 뒷받침하는 초지능 네트워크 구축
 - 유·무선 백본망 용량 확대
 - 이동통신·컴퓨팅 기능을 융합한 지능형 기지국 구축·확산
- AI 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 인프라 강화 및 체계적 지원
 - 데이터안심구역 확대 및 산재된 데이터를 일원화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

02

초격차 AI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 글로벌 TOP 10 수준의 독자 인공지능 모델 확보 및 차세대 원천기술 (AGI(범용 인공지능)) 확보 추진
 - 세계적 수준의 AGI 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 AI연구조직’ 설치
- R&D 및 사업화 적시 지원을 통한 차세대 AI반도체 기술력 선점
 - 저전력·고성능 NPU·PIM 등 차세대 AI반도체 기술력 선점을 위한 R&D 지속 추진
 - * NPU(Neural Processing Unit): AI연산에 특화된 프로세서로 전력 소모를 최소화
 - PIM(Processing-In-Memory): 메모리에 연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 기능을 통합
 - 독자 인공지능모델과 연계한 NPU 성능 고도화 등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
 - 국민성장펀드·AI정책펀드 등과 연계한 맞춤형 지분투자로 성장 자금 지원
- AI 원천기술을 깊이 연구할 AI 핵심 인재 양성
 - AI 중심대학 선정 및 AI대학원 지원 확대
 - 지역 전략산업 연계한 AI 특화인재 양성
- 전 산업 혁신을 주도할 AX 융합인재 육성
 - 3無(교수·교재·학비) 기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고도화 및 지역 확산
 -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기업 협력형 AX대학원 설립 확대

지역·산업, AI를 만나 ‘AX(AI대전환) 대도약’을 시작합니다

- 독자 AI모델을 오픈소스로 개방하여 공공·경제·사회 전 분야 AX 확산 도모
- AI 기반의 지역산업 재도약 특화 프로젝트 추진
 - 대규모 AI 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첨단 산단을 AI으로 전환하는 AX실증산단 조성
- 기업 특성에 맞는 AI 활용 지원 및 혁신AI스타트업 육성
 - 제조기업 AI 팩토리 전환 지원 및 AI 활용·AX 전환을 위한 기술·인프라·데이터 지원
 - 예비·초기 창업가 AI창업패키지 등 AI벤처 스타트업 창업·스케일업 지원

국민의 보편적 권리와 삶의 질을 바꾸는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국민체감 AI 민생 프로젝트 본격화
- 누구나 AI 기술을 적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AI 서비스 개발 환경 제공
 - 온라인 AI실습 플랫폼을 구축하여 AI서비스 개발 실습 기회를 제공
 - AI 교류·협업·교육을 위한 오프라인 거점 구축·운영
- AI·디지털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제공
 - 국민 누구나 AI 교육과정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운영
 - 생활 SOC를 활용한 AI·디지털 배움터를 확대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AI·디지털 파견교육 실시
- 글로벌 AI 협력체계 구축
 - 유엔기구와의 AI 인프라 공유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
 - 유엔 AI 허브 국내 유치로 AI 기본사회 글로벌화에 기여
 - 아·태지역 AI 역량 강화 및 격차 해소

1)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신산업 육성

05

사람 중심의 AI 미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 AI 부트캠프(전문인력 집중양성기관) 통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 AI, SW, 사이버보안 등 기업 수요 맞춤형 계약학과 확대, AI 대학원전문대학원·연구기관 확대 및 AI융복합 학위 과정 증설
- AI, SW 분야 교육자금 대출 제도(한국식 휴먼 캐피탈) 도입
- 군(軍) AI·SW 분야 전문연구요원 복무 확대

■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교육 체계 구축

- 교육 인증서 발급 및 공공기관·기업에서 채용·승진 시 가점 부여
- 비전공자를 위한 AI+X(자신의 전공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실시

■ AI·디지털 인재 역량 강화 기반 조성

- 산업 현장의 숙련된 AI 직무 수행자 활용을 통한 AI·SW 교육 전문강사 보강 및 재직자의 교육 활동 허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AI·SW 분야 경력자와 퇴직자에 대해 최신 기술 재교육 과정 이수 후 전문 강사로 활용

1)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신산업 육성

06

교육혁신으로 AI 인재양성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한 초·중·고 교육혁신

- 한국형 STEAM(과학·기술·공학·인문예술·수학) 교육 강화로 융합적 사고력 함양
- AI·SW 수업시수 확대로 컴퓨팅 사고력 및 문제해결 능력 강화
- 대학·기업 협력을 통한 학교 AI 교육 지원 및 교사 재교육 확대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AI+X' 대학 교육혁신

- 기초학문과 AI를 융합한 'AI+X' 교육모델 추진
- 프로젝트 기반 온라인 AI 학과 확대 및 기업 협력형 AI 학위과정 개설
- 지역거점 AI 단과대학·전공 신설, 타 전공 대학원의 AI 전환 유도로 석·박사 인력 양성 확대
- 성인 대상 AI·IT 재교육 확대를 위한 비학위 과정 운영 확대

■ AI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인재 유치 및 혁신 창업 활성화

- AI를 비롯한 과학·디지털 기술·공학 등 글로벌 인재 적극 유치
- AI 인재 영입을 위한 대학 및 연구기관 지원 정책 개선
- 대학·기업의 AI 혁신 및 창업 프로젝트 추진, 학생의 창업 장려

AI가 주도하는 K-AI시티,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자율주행·UAM·드론·차세대 고속열차 등 미래모빌리티 상용화

- 레벨4 자율차 출시 및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 활용
- 공공서비스 우선 상용화 이후 민간 상용화, UAM허브(김포공항 등) 구축지원 등 K-UAM 조기 상용화 기반 마련
- 드론산업·하이퍼튜브 기술 개발 및 400km/h급 철도 단계적 구축 등 차세대 고속열차 도입

국민 일상에 AI 서비스를 구현하여 삶의 질 향상 및 K-시티 신산업 육성

- AI 도시지능센터·AI 빌딩 등 결합으로 인프라 고도화
- 디지털 트윈, AI 물류·건축·에너지 등 도시서비스 제공
- 스마트도시·4D 지도 등 빅데이터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 규제 재검토로 실증화 토대 마련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 고부가가치의 부품산업, 정비산업, 공항서비스업 등 육성
- K-공항사업 해외 진출 지원 등 글로벌항공 위상 제고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혁신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5극3특 전략과 연계한 지역 거점 바이오클러스터 육성

- 초광역 경제권의 핵심 산업 거점으로 도심형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존 클러스터 간 시설·장비를 함께 활용하는 공동 플랫폼을 구축해 연구·임상·기업 시너지 강화
-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개방형 실험실(Open Lab) 사업 확대로 대학·병원·기업·벤처의 전 주기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구조를 혁신 신약개발 생태계로 전환

- 혁신성에 연계한 약가제도 개선 및 신약 개발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 전 주기 신약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역량을 제도적으로 지원

국가책임 기반 필수약품 공급 안정체계 구축

- 국가-제약사 협력을 통한 위탁 생산체계를 마련해 소아 필수약, 항생제, 백신 등 필수약품의 안정적 공급 확보
- 해외 의존도 높은 원료의약품의 국내 생산시설 현대화와 친환경 전환을 국가가 지원해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의약품 생산 기반 구축

K-컬처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 한류의 글로벌 도약 지원

- K-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추진
- 해외거점 현지화·수출시장·장르별 동반 진출 지원

■ K-콘텐츠 국가지원 강화

- 정책 금융 및 융자지원 확대, 불법유통 근절 및 저작권 보호 강화
- 기능별 특화 인력 양성 및 콘텐츠 R&D·문화기술 지원 강화

■ K-콘텐츠 인프라 확대

- 대형 및 중소형 아레나 공연장 조성으로 한류관광객 유치
- 대중문화예술 전당·국립영화박물관·국립무용원 등 콘텐츠 인프라 조성

국가유산 보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전통문화유산 지원 강화

- 국가유산 보수정비 확대 및 자부담 완화
- 체험형 전통문화유산 지원

■ 국가유산의 재난 대응체계 강화

- 국가유산 관리 강화
-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 자연유산 및 무형유산의 보호 및 국민 향유 인프라 조성

11

K-방산수출 육성 및 획득관리체계 개편으로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K-방산수출 시 국산화개발완료 품목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
- 출연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R&D 연구개발 및 관리를 방위사업청 사업국으로
일원화하여 연구과제의 중복성 해소 및 예산집행의 관리·감독 강화
- 국방운영 효율성과 국내 무기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AI 도입 확대

12

북극항로 거점 항만 특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북극항로 대비 항만 거점 역할 및 특화발전 추진으로 항만 균형성장 실현
 - 서해권/서남권/제주권/동남권/동해권 등 북극항로에 따른 여건 변화를 전국
항만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 수립
 - 5극3특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고려하여 항만별 발전전략 마련
- 해양 관련 기업·공공기관·해사법원 등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 추진
 - 기업 이전 인센티브 마련으로 해운기업 유치 도모
 -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해사법원 등 신설 추진
-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내빙·쇄빙 컨테이너선박 핵심기술 개발 및 건조보조금 지원, 북극항로상업운항
기반조성 지원, 북극항로에 특화된 디지털 항해장비 개발 및 극궤도 VDES 위성통신
기술 개발 R&D 추진
 - 북극항로 협력방안을 위한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 추진(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 참여,
UN해양총회 유치로 북극항로 정상회담 개최 추진)

녹색해운항로 구축으로 글로벌 친환경 규제에 따른 탄소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 글로벌 녹색항로 구축을 위한 한-호주, 한-싱가포르 사전타당성 연구 등 항로 확대 추진
 - 연안 녹색항로 구축을 위한 국내항로 시범운항 항로 선정, 항로 구축 타당성 분석
 - 운항 선사 지원방안 마련 및 관련 법률 제정 등 대응
- 녹색기술 연구개발 추진으로 공급망 확대
 - 암모니아·메탄올 연료공급 실증 및 시범운항 지원
 - 타당성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벙커링 전용선박 설계 등 추진
- 친환경선박 중심 국가수송력 확충을 위한 국적선사 선박금융 확대
 - 친환경선박 전환 보조금 지원 확대

스마트 농업 확산,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을 미래농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산으로 농식품 생산·유통·소비 혁신
 - 데이터·AI 기반 솔루션 보급 확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확대
 - 중소농가를 위한 적정 스마트팜 모델 개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및 펀드 확대
- 그린바이오·푸드테크·동물용의약품·반려동물연관산업 등 농업을 둘러싼 관련 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메디푸드, 푸드테크 산업 등을 세계 수준으로 육성
- 전통식품산업 활성화 및 K-푸드산업 혁신성장 지원
 - 전통식품·전통주 명품 브랜드 육성, 전통주산업 활성화 위한 주세체계 선진화 검토
 - 5대 유망식품(맞춤형특수식품, 기능성식품, 간편식품, 친환경로컬식품, 펫푸드) 집중 육성
 - K-푸드 수출확대를 위해 식품 소부장산업 육성, 식품융합클러스터 조성, 전략품목(딸기, 한우 등) 수출 확대 지원
- 농업 과학기술(R&D) 혁신
 - 농촌현장 필요기술 개발 확대, 민관협업 R&D 연구 강화

K-푸드 수산식품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여 수산물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K-수산식품 수출 유망 품목(김, 감태 등) 지원 확대

- 수산식품산업 육성 가공설비지원을 통해 수급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물가 안정 및 어업인 소득안정 도모

■ 기업 육성을 위한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지원 및 품목육성을 위한 수산선도조직 육성사업의 예산 확대로 우리 수산물의 수출경쟁력 강화

- 수산식품기업의 성장 사다리형 수출바우처 제공 지원을 통해 수출 강소기업 육성
- 생산·가공·수출기업 연계 선도조직 육성 지원을 확대하여 품목별 역량 강화

■ 전략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 외연 확장 및 (가칭)김산업 진흥연구원 신설

- 무역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박람회·무역상담회 지원 확대 및 K-브랜드 협업사업 확산 등 시장 다변화 추진
- (가칭)김산업 진흥연구원 신설을 통해 품질개선 등 김산업 진흥 도모

첨단전략산업 혁신으로 미래 성장기반과 경제안보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 경쟁국이 넘볼 수 없는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 한국형 팹리스-파운드리 생태계 구축 등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역량 총결집
- 자동차, 가전, 로봇, 방산 분야 수요연계 NPU 등 AI 반도체 개발

■ 이차전지, 로봇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 (이차전지) 전고체 등 차세대 기술 개발 및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신규 수요 창출
- (로봇) AI를 접목한 제조, 유통, 농업 등 산업특화 휴머노이드 개발

■ 미래차 시장 선점, 조선업 경쟁력 강화

- (미래차) AI 자율주행 알고리즘, 차량용 반도체, SDV(Software Defined Vehicle) 플랫폼 등 미래차 3대 핵심기술 개발
- (조선) LNG 화물창(KC-2) 실증, 암모니아 등 차세대 동력체계 핵심기술 확보

II.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00개 공약

2. AI 등 신산업성장·경제대도약

- 1)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신산업 육성
- 2) 산업경쟁력 강화·성장기반 구축
- 3) RE100·기후위기 대응

2) 산업경쟁력 강화·성장기반 구축

01

국가대전환 성장을 주도할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범부처 과학기술인재 양성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부처별 산재된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과 지원체계 일원화 추진
- 이공계 학부·석·박사·신진연구자에 대한 전 주기적 지원 강화
 - 국가우수장학생 선정 확대 및 장학금 증액으로 지원 강화하고 연구생활장려금 (Stipend) 현행보다 대폭 확대
 - R&D 학생인건비의 비과세 대상(연구장려금)으로 전환과 신진연구자의 독자적 연구 기회 보장을 위한 풀뿌리 기본연구 지원 확대
-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없는 연구 지속을 위해 연구전문직(Staff Scientist) 활용과 대체인력 유형 다각화 등 대책 도입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은퇴 후 R&D 혁신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확충 등 지원 지속 강화
- 공공·민간 협업 기반의 연구자 처우 개선 추진
 - 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상승분 세액공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추진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 R&D 예산의 안정적 확대와 편성의 전략성과 전문성, 유연성을 높여 기술주도 성장의 기반 마련
 - 연구생태계 회복과 과학기술주도 성장 실현을 위해 R&D 예산 안정적 확대
 - R&D 사업 심의 범위 확대와 충분한 심의 기간 보장으로 정부 R&D 예산 심의 기능 강화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 R&D 사업에 대한 혁신본부 중심의 단일평가 체계로 전환하여 일관성 있는 평가 및 예산 환류 체계 마련
- 연구개발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하고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을 중장기 연구개발로 전환
 - 새로운 지식과 미래 기술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연구에 연구개발 투자 확대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한 평가체제 혁신
 - 제재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동기부여 방식의 평가체제로 전환하여 성과 창출 유도
 - 단기성과를 강요하는 평가보다는 연구자의 자율성과 장기간 연구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고효율 평가방식으로 혁신
- 장기적이고 일관된 기초연구 장려를 위해 '한우물파기'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대상을 다각화
- 연구직의 지위를 명문화하고 연구자 행정부담의 획기적 경감 추진
 - 법적 공백으로 지위가 불안정한 박사후 연구원의 지위 명문화 및 연구전문인력 (Staff Scientist)에 대한 별도 직군 신설과 관련 법·제도 개선
 - AI 활용으로 일부 연구행정 업무 자율화와 연구비 사용 관련 네거티브 방식 도입

세계시장을 선도할 미래전략기술 육성에 매진하겠습니다

- 미래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R&D를 넘어 인력양성, 실증·조달, 제도 개선 등 사업화까지 포괄하는 지원체계 마련
 - 민간 협업으로 R&D 수요 도출 및 사업 공동 추진하여 사업화 및 시장진입까지 전 주기를 연계하는 모델 확산 지원
 - 공공기술성과 활용을 제고를 위해 부처의 기술매칭·성과활용 플랫폼 연계를 강화하고 규제샌드박스 연계도 지원
 - 과학기술편드를 활용, 민간투자자와 연계한 후속 투자 유도로 사업화 촉진하고 관련 해당 사업화에 세제혜택 확대
-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고위험 R&D 연구를 수행하는 혁신 연구조직 설립
 - 세계 최고 민간 전문가(PM) 중심의 책임운영 체제, 파격적 인건비 지원, 자유로운 연구 수행을 위한 행정 지원 등 특례 부여
- 첨단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 범부처 국제협력 전략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 중심의 전략위원회를 운영하여 기본전략 수립

제조 AX으로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첨단 AI 팩토리 구축 및 업종별 최고수준 AI 모델과 제품 개발
 - AI 팩토리 구축 확대 및 양질 데이터 기반 제조 AI 생산 모델 개발
 - 완전자율운행선박 등 AI 탑재된 제품 융합으로 경쟁력 혁신
- 공급망 내 수직적 AI 혁신 및 지역산업으로 AI 확산
 - 공급망 내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활용 가능한 AI 기술개발 및 현장 적용 프로젝트 집중 지원
 -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AX 실증산단 조성 확대
- 제조 AI대전환의 필수 투입요소인 데이터·예산·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
 - 데이터 수집·가공·활용위한 플랫폼 구축
 - (가칭) 「제조AI전환(M.AX)법」 제정으로 예산확대·규제개선 등 체계적 지원

수출·통상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품목 고도화 지속 추진

- 원전, K-푸드, 방산, 전력기자재 등 신성장·고부가 유망 전략품목에 대한 지원 확대
-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내수 강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신흥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확대

■ 국익 극대화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

- 통상과 무역으로 얻은 성과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국익 우선의 통상 추진, 국내산업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양·다자간 통상협정 확대로 경제영토 확장
-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 탄소국경조정·RE100·ESG경영 등 환경무역장벽에 대한 선제 대응

■ 대미 전략적 투자와 우리기업의 참여 확대

- 대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투자금 회수가 확실한 투자 프로젝트 발굴
- 대미 투자 수익을 활용한 국내투자 및 현지수요 기자재 수출 등 추진

규제는 풀고 성장은 밀고,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 OTT에 대응한 레거시 방송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 신·구 미디어를 아우르는 합리적 미디어 법제 마련
- 네거티브 광고 규제체계 도입, 협찬제도 투명성 등 방송 광고·편성 규제 완화
-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 및 소유·겸영 규제 개선 추진

■ AI·디지털 기술로 방송산업 생태계 혁신

- 방송 기획·제작·유통 전 주기 AI·디지털기술 적용 지원으로 생산성 혁신
- 방송영상 AI 학습 데이터 구축 및 한국형 AI 모델 개발 지원

■ 청년을 위한 미디어 창업 허브 조성 및 창작 역량 지원 강화

- 창업·창작공간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1인 미디어 지역센터 확대
- 청년 크리에이터 육성과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 한류의 강점을 살린 미디어·콘텐츠의 글로벌시장 진출 도약 지원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글로벌 기업과의 국제교류 및 국제 행사 참가 지원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첨단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생산에 따른 고용촉진을 위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추진
 - 국내 가치사슬을 육성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실용경제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확립 및 위기관리 체계 고도화
 -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 효율화 및 경제부처-외교부 간 협업 강화를 통해 공급망 교란 등 외부 충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 확보
 - 자원 부국과의 전략적 ‘핵심 광물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추진
 - 중동전쟁으로 인한 전쟁·유가 급등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외교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추진
- 재외공관의 ‘세일즈 외교’ 전진기지화 및 수출·수주 총력 지원
 - ‘민관합동 수출·수주 외교지원단’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입 장벽 해소
 - 전 세계 재외공관을 활용한 현지 맞춤형 시장 정보 적기 제공 및 대규모 프로젝트 (원전, 방산, 인프라 등) 수주 지원 강화
- UN AI 허브 유치 및 글로벌 규범 선도
 - 전 세계 AI 기술의 표준, 윤리, 저작권, 안전 규범을 총괄하는 UN 산하 핵심 컨트롤 타워 설립
 - AI, 쿼텀, 바이오,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의 글로벌 표준 설정 및 국제 거버넌스 논의 주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건설경기를 회복하겠습니다

- **악성 미분양(준공후 미분양) 해소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 제고**
 - 지방 주택시장 여건을 반영해 미분양 주택 취득시 발생하는 세제 부담 완화
 - 악성 미분양 지역에 한시적 매입임대 활성화 방안 마련 및 LH의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물량 점진적으로 확대
 -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한 CR리츠 활성화
- **공공 분야 SOC 조기집행으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 건설공사 업역 간 경쟁체제 불공정 개선, 불합리한 직접시공 규제 폐지 등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 건설시장 진입기준 합리적 개선, 건설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개선 등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 **건설경쟁력 강화로 건설강국 중흥**
 - 스마트건설기술 인프라 구축 및 건축, 주택 등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 해외건설 인프라펀드 획기적 확대
 - 건설기능인 등급제 활성화

적극적 재정운용을 지원하여 잠재성장률을 높이겠습니다

-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심의**
 - 성과평가 강화를 통해 관행적 성과저조 사업, 낭비성 중복 지출, 방만한 재정 관리 사업 배제
 -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출 지원
- **인적·물적 자본 축적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지원**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간접 재정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
 - 근로자·기업·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교육·R&D·SOC 적극 지원
-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강화**
 - SOC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 완화

12

적극적으로 국부를 창출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 정부가 지원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

- 정부와 공공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창출한 성과를 미래세대에게 제공

■ 한국형 국부펀드를 운영할 유능한 투자기구 설립

- 국민·국가·공공의 자산을 키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독립적이고 유능한 전담 투자단 설립

13

공공기관 경영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경영 방향 및 평가의 독립성 강화

- 공공기관 경영지침 마련 시 민간위원 참여 확대 통해 독립성·객관성 제고
-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 시 전문기관을 통한 독립적 시행 추진

■ 공공기관 성과 평가 및 배분의 개방성 제고

- 공공기관의 기관장·이사에 대한 평가제 도입으로 경영 책임성 제고
- 공공기관 보수 결정 운영위원회에 노동자 대표 포함 추진

ESG 경영 지원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공공성 강화로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 시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ESG 평가 체계 구축
- ESG 평가 우수기관일수록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 제도 개선

■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촉진

- 공공기관 ESG 평가 시 지역 중소기업 참여 및 고용 유발 정도 등 지역경제 기여도 반영

■ 기업의 ESG 경영 지원으로 국제적 기업경쟁력 제고

- 기업 ESG 평가·공시 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ESG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 공공구매 우대 등 정부·공공기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II.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00개 공약

2. AI 등 신산업성장·경제대도약

1)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신산업 육성

2) 산업경쟁력 강화·성장기반 구축

3) RE100·기후위기 대응

01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 재생에너지 공급기반 확충과 산업성장 기반 구축

- 산업단지 및 공장 지붕을 활용한 산단형 태양광 대폭 확대
- 공유지, 국가관리 간척지 등 계통여유지역 유휴부지 중심 신속 보급
- 공공기관 K-RE100을 통해 공공부문이 재생에너지 보급 선도
- 접경지역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및 전력망 구축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개선을 위한 이익공유제와 지방정부 인센티브 확대
- 소규모사업자 수익성과 시장참여를 전제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구축과 국내 제조경쟁력 강화

- 국민성장펀드 활용과 공적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 탄소인증제 활용 국내 태양광 제조기반 구축
- 에너지안보와 연계한 태양광, 풍력 핵심 소재·부품 국내 공급망 구축

■ 석탄발전소 폐지 로드맵 수립 및 정의로운 전환 추진

-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려하여 2040년까지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확대를 통해 발전기업 및 지역 일자리 창출
-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02

AI 기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지도를 만들겠습니다

■ 2030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및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 서해안 해저 HVDC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
- HVDC 기술개발을 통한 새만금~서화성 구간 조기 구축
-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을 잇는 U자형 전력망 구축

■ 유연하고 스마트한 AI 기반 분산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 산단, 대학, 군부대 중심 지산지소형 AI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 분산에너지특구 확대 및 AI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입지 유도
-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발전, 가상발전소(VPP) 등 유연성 자원 확대

■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벨트 조성 및 첨단기업 유치

- 전남·서남해·제주를 해상풍력의 메카로 조성
- 해상풍력 벨트로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등 첨단전략 산업 RE100과 연계
- 경기도~서남해~남해안~영남내륙을 잇는 태양광 산업벨트 조성

실효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저탄소·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탄소감축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추진

- 2035 NDC 감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추진
-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책임 있는 중간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및 기후대응기금 확대

탄소다배출업종의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지속 추진

- 수소환원제철(철강), 나프타 열분해공정의 저탄소화(석유화학), 친환경 연료 추진선(조선) 등 주력산업의 저탄소 신기술에 대한 R&D 강화
-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친환경 공정, 시설 전환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그린모빌리티 전환에 따른 사업전환 지원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 에너지수요관리와 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 AI·빅데이터·클라우드가 융합된 수요·효율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구축
-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강화
- 민간·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노후건물의 에너지효율화

K-GX(대한민국 녹색대전환)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전략으로 전환하겠습니다

2035 NDC 이행을 위한 전 부문 녹색전환 추진

- K-GX 추진단 구성 및 국가 GX 전략 수립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 중심 범정부 NDC 이행 점검 및 지방정부 탄소중립 지원
-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안정적 운영

탄소중립산업 성장 기반 구축

-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전환 촉진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 「기후테크 특별법」 제정 및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전기화 기반 에너지 전환 확대

- 전기차·수소차·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및 보조금 체계 개편
- 급속·양방향 충전기 확충 및 V2G 전력거래 체계 마련
-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등을 통한 히트펌프 보급 촉진 및 건물부문 탈탄소 제도 개선

05

탄소중립 산업대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산업그린전환촉진법」 마련 및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 추진

- 기존 「친환경산업법」을 (가칭) 「산업그린전환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한국형 민관 협업 방식의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추진 기반 마련
-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과정에서 탄소다배출 산업, 중소·중견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 추진

탄소다배출 주력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및 탄소중립 기술혁신 지속 추진

- 수소환원제철(철강), 나프타 열분해공정의 저탄소화(석유화학), 저(低)온실가스 대체가스 개발(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쉐 주 R&D 강화
-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친환경 공정·시설 전환 등에 대한 지원 강화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발굴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

- 친환경 차량·선박, 저탄소 소재·부품, AX·GX 융합 등 기후테크 신산업·신기술 육성
- 재제조·재활용 비즈니스 산업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 산업부문 순환경제 촉진

금융권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투자 촉진

- 지방정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주거대출·보험사 등 선정 시 기후금융실적(재생 에너지·탄소중립 사업 투자, 주민참여형 기후프로젝트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

06

청정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믹스와 전력시장 혁신으로 에너지 안보와 미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에너지믹스 구축

- 기존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계속 운전 추진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유연한 원전 운영체계 구축

전력시장제도 혁신으로 전력시스템 대전환

- 전력수급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시장 도입
- 공정한 전력시장 및 안정적 전력망 운영을 위한 전력감독체계 개선

청정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 산업생태계 구축

-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수소 산업클러스터 조성
- 수소 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수소터빈 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여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

-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는 전력망 고도화 및 계통 안정성 강화
- 전력망·에너지 인프라 보안 및 재난 대응체계 강화
- 핵심 에너지자원 수입선 다변화 및 국가에너지 수급관리 체계 강화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기후보험 3종 세트*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①전통시장 소상공인, ②공공건설 일용직 근로자, ③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 3종 세트 시범사업 추진

* 기후보험 :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국민과 기업이 기후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과 피해에 대비하여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보험

- 지방정부가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보험을 선택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피보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 체감형 보험으로 설계

-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가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손해사정 없이 즉시 정액 보험금 지급, 일부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확인절차 최소화

-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가며 보험수혜 대상 및 보장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햇빛소득마을 조성, 농어촌 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농어촌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겠습니다

- 마을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으로 고유가시대 농어촌 에너지 자립도 제고

-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 구성, 공공부지, 마을부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운영
- '30년까지 2,500개 조성 목표로 태양광 설치비, 계통 우선 접속 등 지원
- 태양광 발전 수익은 정관 및 주민들 의사에 따라 마을 복지, 햇빛연금 등에 활용
- 민관합동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마을주민 대상 교육, 컨설팅 등 지원

-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등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농어촌 RE100 단계적 도입

- 영농과 태양광 발전 병행을 위한 「영농형태양광법」 제정
- 수상태양광, 산림바이오매스, 축산바이오가스 등 농촌의 다양한 에너지자원 활용
- 스마트팜·축사·시설원예·유통가공시설·식품공장 등 농식품 전 분야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송전망 경과지역 지원 확대와 햇빛소득마을 제도화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전력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송전망 경과지 토지주, 마을주민,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확대

- 신속 합의 시 토지주 보상액 최대 75% 추가 지급
- 마을 주민 지원금 확대 및 송전망 경과 지방정부 지원금 신설

■ 햇빛소득마을 연계를 통한 안정적 소득 창출

- 송전망 경과지를 햇빛소득마을 우선 대상으로 지정하고 계통 우선 접속 지원
- 장기·저리의 정책자금 지원 및 지역 상호금융기관까지 금융 참여 확대
- 계통포화지역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 주민참여형 에너지 사업 확대로 송전망 경과지의 소득창출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우대
- 초기투자 부담완화를 위한 마중물 지원으로 자부담 없이 연금식 수익창출 지원

RE100 산업단지 확산으로 국가균형발전과 RE100을 실현하겠습니다

■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망을 갖춘 지산지소(地産地消)형 RE100 산업단지 조성

- 지방정부 주도로 개발계획 수립하고 정부 지원 하에 배후 정주시설과 연계하여
산업단지 조성
-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발전설비 저리 용자, 분산 전력망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경제적 재생에너지 공급

■ RE100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 입주기업에 최고 수준 세제·재정 패키지, 재생에너지 구매 등 인센티브 제공
- 주택, 보육·학교시설 공급 및 규제 특례 등으로 교육·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 후 입지를 선정하여 RE100 산단 신속 조성

- 특별법 신속 제정으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RE100 산단 확대

11

분산에너지 특구와 RE100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산지소 기반 전력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수출기업 RE100 대응을 위한 RE100 역량 강화

-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글로벌 허브로 조성
- 전남을 해상풍력의 전초기지로 조성하여 데이터센터 유치와 연계
- 수출기업의 기후통상 대응역량 강화

지역별 에너지 혁신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구 확대

- 분산에너지사업자-전기사용자 간 전력 직접거래 허용
- 규제 특례로 전력 신산업 실증 및 초기 시장 창출
- 지역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전력시스템 구축

에너지융복합단지를 지역별 에너지 신산업 성장거점으로 육성

- 에너지특화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재생에너지 전환에 부합하는 기후테크 신산업 발굴·육성
- 기반시설 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역량 강화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홍수·가뭄·수원 다변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홍수발생 지역) 지하방수로 및 대심도 빗물터널추가 설치 추진, 하수도중점 관리지역 확대 추진, 홍수조절지 및 하천 저류지 설치 확대, 국가·지방하천 배수시설 개선 및 지방하천 제방보강 추진

(물부족 지역) 지하수저류댐, 해수담수화, 샌드댐 추진, 노후상수도 개선사업 확대 추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 지방정부 지원 추진, 도서관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스마트 음수대 설치 지원

(낙동강 등 취수원 다변화 필요 지역)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 개발로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제공 추진

* 복류수(伏流水): 하천이나 강의 물이 하상(河床) 아래의 모래·자갈층을 따라 스며들어 흐르는 지하수

탄소저감을 위해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경유버스를 ‘수요응답형 전기버스’로 전환하겠습니다

-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버스의 단계적 전기차 전환 지원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생활환경 개선
 - 어린이통학버스를 전기차로 전환, 어린이 등굣길의 매연·소음 문제 해소
-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전기버스(DRT) 전국으로 보급 확대
 - 승차 인원이 적은 노선·시간대부터 과거 인구구조에 맞춰 설계된 고정 노선버스를 전기 수요응답형 버스로 단계적 전환

탄소중립 실현과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지역 맞춤형 탈플라스틱 대책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종량제봉투 직매립 대책을 지원하겠습니다

- 자연생분해 소재 중심의 탈플라스틱 전환
 - 농업용 멀칭필름, 어업용 해양부표, 종량제봉투 등 회수체계 구축이 어려운 제품군을 중심으로 자연생분해 또는 저탄소 소각 처리가 가능한 소재 적용을 확대하여 기존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환경 부담 완화
- 장례식, 결혼식, 운동회 및 각종 지방정부 행사에 필요한 용기를 생분해성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사업 지원 확대
- 플라스틱 조화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및 현화문화 개선
- 종량제봉투 속 폐비닐 등의 자원을 재활용하고 종량제봉투 소각량 및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생활폐기물 분리·선별 전처리시설 설치 추진
- 광역소각장 신·증설 시 지역 인센티브 지원 확대

15

국립공원, 습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방마다 다양한
탄소흡수원을 조성하겠습니다

- 육상·해양의 자연생태보호지역 지정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등 탄소흡수원 조성·확대 추진
 - 국립공원 탄소흡수 기능 강화, 습지생태계 복원, 갯벌·염습지 복원, 산불피해지 복원 사업 추진
- 비점오염저감과 탄소중립을 접목한 탄소흡수형 비점오염 관리 대책 추진
 - 농촌지역 등 전국에 산재한 휴경농지 및 유휴부지에 자연형(식생형) 비점저감시설 설치 추진 지원

16

탄소중립시대,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구조개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친환경 대형 수송 모빌리티(전기·수소 선박·열차 등) 실증화 지원 및 수소연료 보조금 등 지원 방안 추진
- 제로에너지 건축물·그린리모델링 확대
 - 공공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보급·확산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방안 마련 및 녹색건축인증 개편 등 제도 개선

친환경·유기농업을 두 배로 확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농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지원

- 친환경·유기농업을 두 배로 확대하고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 적정 사육두수 관리, 사료비 절감 등 경영안정방안, 동물복지·생태축산 활성화
-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경축순환직불제 도입, 가축분뇨 자원 재활용 활성화

■ 탄소중립직불제 도입 등으로 저탄소 농축산활동 지원

-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을 탄소중립직불로 확대 개편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등 축종별 저탄소 축산활동 지원

■ 고위험 감염병 지역별·축종별 예방 관리 체계 구축으로 국가책임 방역 강화

- 과학적인 예방 방역체계 구축 및 살처분 보상 기준 개선

임업·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 주요산업이자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수호

-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에 대비한 스마트 산림재난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산불진화 국가 총력 대응체계 구축, 헬기·진화차량 등 진화자원 대폭 확충, 특수진화대 확대·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일상회복 가능한 수준으로 피해주민 지원제도 개선

■ 지속가능한 '백년 숲' 산림 순환 경영과 임업 활성화

- '베고-심고-쓰고-가꾸는' 산림순환경영, 국내산 목조건축 및 임산물 산업 생태계 구축
- 임업직불제 확대,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및 산지은행 도입

■ 도시부터 산촌까지 건강한 산림 육성과 국민이 함께 누리는 산림 서비스 강화

- 생활권 도시숲 조성 및 정원도시 확대로 숲세권 확충, 산림 관광·레포츠 활성화
- 숲교육프로그램 확대, 산림 치유 활성화, 숲 산후조리원, 숲 요양원 등 확대

■ 국내 산림의 탄소 흡수력 증진과 호혜적 국제·남북 교류협력 추진

- 환경 친화적 숲가꾸기 및 선진국 수준으로 임도 개선, 임업 기계 고성능화, 수종전환
- REDD+, ODA를 통한 황폐지 복구, 재난대응, 탄소감축량 확보 및 한반도 생태계 회복

해양오염 분포 대응 및 수거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청정한 우리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 기존의 해안가 쓰레기 모니터링에서 벗어나 드론과 AI를 연계한 전국 단위 해양폐기물 실태조사 실시
 - 해양폐기물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확대
 - 해양폐기물 관리 체계를 과학·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여 국가 해양환경 관리 역량 강화
-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확대 운영 및 해양쓰레기 수거 국가책임제 도입
 - 국가 해양쓰레기 및 해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사업 운영 확대
 - 지방정부 지원사업으로 운영 중인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
- 해양생태계 파괴 주범인 페어구 수거 강화·유인을 위한 어구보상금 상향 추진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지방정부) 확대
 - 페어구 공동집하장 및 광역집하장 설치·운영 확대

II.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00개 공약

3. 기회보장·국민성공

1) 청년밀착지원·국민자산형성

2) 가계생활비 경감 지원

3) 창업·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01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여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의 적극적 운용을 통한 미래전략산업 자금공급 대폭 확대
 - 보증·대출·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금을 맞춤형으로 지원
 - 비수도권 지역에 전체 자금의 50% 이상을 투자하여 균형발전 견인
- 국민공모 및 연기금·민간 금융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형펀드를 조성하여 기업성공의 과실을 국민들과 공유
 - 장기투자에 대해 대폭적인 조세지원(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 보다 많은 국민이 성장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서민층 가입을 우대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액을 차등화
- 기후테크 투자 확대 및 ESG금융 강화
 -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및 기후기술을 미래산업의 성장엔진으로 육성
 - 중소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및 ESG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02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습니다

-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감안한 주식시장 재구조화
 -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대내외 투자자 신뢰성 확보 및 만성적 저평가 해소
 - 안정적 기관투자자 진입 여건 조성 등을 통한 코스닥 시장 신뢰 제고 병행
-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노력
-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을 통한 주식시장 수요 기반 확충 및 기금 수익률 제고
 - 장기 성장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 주권상장법인 인수·합병가액 결정 시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 적용
 - 합병 등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사회 책임 강화
- 상장회사 지배권 변경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일정 물량 이상의 신주인수권
부여
- 의도적으로 장기간 주가를 낮추는 저PBR 상장사 문제 해소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겠습니다

- 상장법인 임직원·주요주주 등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청구하도록 의무화
 - 사기·횡령·배임 등 상장법인 임원의 중요 전과기록 의무공시 단계적 확대 병행
-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향조정 및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 도입
 - 불공정·불법행위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벌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관련 피해자
손실 보상 지원
- 사모펀드 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감독장치 마련
 -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위한 차입규제 강화, 업무집행사원(GP)의 금융당국 보고
의무 확대, 대주주 등 주요 출자자 적격 요건 도입 등 추진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기반 조성

*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 또는 실물자산에 가치를 연동하여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자산

-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규율체계 신속 마련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국가 차원의 산업육성을 위한 혁신로드맵 마련

■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 단계적 제도화 추진

-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 도입 추진
-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이 가능한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활성화 유도

■ 블록체인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 블록체인 생태계의 안정적 성장 지원

- 민간 중심의 실증사업 발굴, 규제 간소화 등 디지털자산 혁신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블록체인 특구 실효성 제고 등 기업성장을 위한 지역 인프라 확충

미래를 위한 투자,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하겠습니다

■ 자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대상부터 적용
- 정부가 자녀 출생부터 펀드를 가입하고 일정 금액을 정기 입금하는 방식
- 부모의 매칭적립도 허용하고 매칭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성인 이후 인출하도록 운영

청년 밀착 지원으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 청년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강화로 일할 기회 확대

-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등 취업을 주저하는 '준비중 청년'에 대한 회복 지원 강화
- 국민취업제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및 자발적 이직자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 AI 분야 등 채용연계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확산 및 청년 기업 성장지원 강화

■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 청년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 확대

- (첫 보험료 지원제도) 만 18세 도달 청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일정 기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연금 가입 기반 강화
- (군복무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추진

■ 청년 가구, 1인 가구 지원 확대

- 1인 가구 등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주택 및 공유주거(share house)* 보급 확대, 우울, 분노, 스트레스 상담 및 검진, 건강관리 프로그램, 여가 및 취미활동 등 지원 확대
- * 공유주거: 공동주택으로서 주방, 창고 등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여러 가구가 공유함으로써 주거비용 절감
- 화재 등 응급상황 감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기기·장비 보급, 지역사회 신속지원 체계 강화

■ 결혼 준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해소, '깜깜이 스토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견적' 투명화

■ 청년정책 기반 강화

- 사회진출 연령대 상승을 감안한 청년 연령 현실화 추진
- 부처별, 지방정부, 단체별로 상이한 청년 기준 재정립으로 정책대상자 혼선 방지

■ 청년 채무조정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시스템 강화

- 정부위원회 청년 위원 위촉비율 상향 조정
- 25개 장관급 중앙부처에 청년 보좌역 임명 추진

1인가구, 청년을 위한 주택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 1인가구·청년이 살고 싶은 '직주근접(직장과 주거가 근접) 슬세권(슬리퍼+역세권)' 주거복합플랫폼주택 확대 조성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역세권, 주거상업고밀지구) 확대
- 철도차량기지·GTX환승역·공공청사 등 복합개발로 직주근접 가능한 주택 공급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생활형SOC 연계된 주택공급

■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전세자금 이차보전 등 전세 관련 부담 완화정책 확대
-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추진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완화 및 대상주택 범위 확대
- 청년 대상 청년주택드림 청약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저리자금 지원 확대

■ '생애 첫 독립' 1인가구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주거설계지원 사업 추진

- 지역별 수요-공급을 반영한 '주거지도' 작성으로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
- 복잡한 전세·월세 계약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추진
- 1인 가구 맞춤형 셰어하우스, 여성안심주택 등 공급 확대

■ 원룸·오피스텔 등 '깜깜이 관리비' 방지로 투명성 강화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 첫 출발과 정착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 시설보호 종료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시설 퇴소 후 경제적, 주거, 교육, 생활, 취업, 의료 등 연속적 지원체계 마련

■ 상이한 자립 지원체계 및 지원수준을 재조정하여 시설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 해소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별로 퇴소 청년이 자립지원수당, 자립 정착금 지원 등의 지원수준이 상이한 문제 해소
- 안정된 주거정착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지원
- 교육 기회 보장 및 정서·심리 지원 등 관계망 형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립 지원

II.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00개 공약

3. 기회보장·국민성공

1) 청년밀착지원·국민자산형성

2) 가계생활비 경감 지원

3) 창업·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 가계생활비 경감 지원

01

전국 어디서나 적용되는
모두의 카드(K-패스)로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모두의 카드(K-패스)로 지역에 따른 교통복지 격차 해소
- 신설된 정액형(일반국민 / 청년·2자녀·어르신 / 3자녀 이상·저소득) 환급 방식 안착 통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02

에너지가격급등·고물가·고환율로 인한 가계지출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운수업 종사자(화물차·전세버스 등), 농어업·임업 종사자, 연안화물선·여객선 등에 대한 유류비 지원
- 석유화학제품 원료(나프타) 수입 지원 및 요소 등 원자재 불안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농업용 무기질비료·축산사료 지원
- 저소득 기후민감계층(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03

청년·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및 농식품바우처 확대 등 식생활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 청년, 산단 근로자 등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지원 강화
 -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확대
 - 농식품 바우처 제도 확대 등을 통한 맞춤형 식생활 지원
- 영유아 급·간식 및 군급식 제도 개선
 - 유치원·어린이집 지역별 급·간식비 격차 완화 추진
 - 장병의 건강 식단 보장 및 군급식의 지역산·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소비 확대

04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로 배움에서 소외되는 아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관리 체계 구축

-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에 최우선으로 예산과 전문인력 지원
- 국가수준의 기초학력 진단도구 변경·재개발(인지, 정서, 건강을 포괄하는 학생진단 도구 개발)
- EBS 교재(e-Book) 초·중·고 전 학년 무상 제공으로 EBS 콘텐츠와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형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 기초학력 학습안전망 지원 확대

- 기초학력 전문교원 확충으로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별지도 강화
- 교육청별 기초학력진단평가를 통해 학생의 성취수준 결과를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제공(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협업)

■ 초등 정서행동·학습지원 전문교사제 도입

- 특별한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전문교사 배치
- ADHD, 우울·불안, 난독증, 난산증, 경계선지능, 다문화 배경 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정서행동·학습지원 강화

05

교복 가격 품목별 상한가 설정으로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교복 가격 전수조사를 통해 생활복, 체육복을 포함한 교복 가격 적정성 검토

- 전국 학교 교복 가격 전수조사로 생활복을 포함하여 티셔츠, 바지 등 품목별 상한가 결정
- 교복 시장 현황과 구조 등 분석하여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학교 주관 구매제도 개선

- 생산자 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 참여 활성화
- 정장형 교복에서 생활형 교복,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 전환 추진

■ 교복 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 입찰 담합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 감시 및 조사로 엄정 대응

06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일상 속의 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바우처 확대

- 저소득층·청년·경로·장애인 대상의 문화이용권 확대
- 지역축제, 문화교육프로그램 등 사용처 확대

■ 학교·직장·돌봄 연계 문화향유 시스템 구축

- 초·중·고 방과후 및 평생교육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연계
- 돌봄시설·요양시설 방문형 문화예술 서비스 도입

■ 국가산업단지 문화생활 여건 강화

- 국가산업단지형 문화가 있는 날 실시 및 지원
- 산단근로자 문화·체육 동호회 활동 지원

07

생활스포츠 활성화로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겠습니다

■ 생애주기형 맞춤 스포츠활동 지원

- 방과후 체육수업, 가상스포츠 체험 지원 등 유·청소년기 스포츠 참여 확대
- 어르신 스포츠 강좌 확대 및 수강료 지원

■ 지역 스포츠 인프라 지원

- 국민체육인증센터 확대
- 청소년형·어르신형·장애인형 체육시설 및 개방형 파크골프장 확충

■ 스포츠 참여 포인트 지급 및 유료 체육시설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함께 이루는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국민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취약계층·고위험군 보장 강화

-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질환을 확대하고 본인부담률 단계적으로 인하
- 희귀질환 의약품·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신속화하고, 정부 직접 공급을 확대해 환자 접근성 제고

■ 건강 예방 중심 보장성 강화로 장기적인 의료비 지출 구조 개선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노인 구강건강 악화로 인한 추가 의료비 부담 예방
- 계절독감 국가 예방접종 지원을 14~18세 학령기 청소년까지 순차 확대해, 집단 감염과 의료비 지출 선제 차단
- 노인 중증호흡기질환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예방적 치료 체계 강화,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항체의 건강보험 적용 추진

■ 치료 효과가 명확한 분야 중심의 합리적 보장성 확대

- C형 간염 등 완치 가능한 질병에 대해 국가검진과 관리체계를 강화해 장기 합병증과 재정 부담 동시 감소
- 전립선암 등 치료 효과와 비용 대비 효과가 검증된 질환에 한해 로봇수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

II.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00개 공약

3. 기회보장·국민성공

1) 청년밀착지원·국민자산형성

2) 가계생활비 경감 지원

3) 창업·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01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저금리 대환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 추진
 - 저신용·창업·청년 소상공인 지원 및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 소상공인 보증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 출연 등 지역신보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보 추진
- 소상공인·자영업자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확대

02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를 발행하여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보험 등 납부 시 활용
- 상가 관리비내역 공개의무 등 투명성 강화 및 관리비 꼼수 인상 방지
-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신설 및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 화재공제 가입대상을 전통시장에서 상점가와 골목시장으로 확대
- 소상공인 대상 단계별 AX·DX 지원 확대
 - (AX) 교육, AI 홍보물 제작, 데이터 활용 등 단계별 지원
 - (DX) 소상공인 키오스크·테이블오더 자동화기기 등 디지털·스마트 기기 지원 확대
- 광역형 소공인 도제교육센터·스마트 공방을 확대하여 소공인 디지털 전환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대
 - 여성 자영업자 육아휴직 지원 추진
 - 범죄예방 물품 지원, 경찰청 연계 안심콜 등 여성 소상공인 안전 강화
 - 자영업자들이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확대

03

지역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겠습니다

- 앵커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 외국 관광객이 K-문화를 체험하는 '글로벌 상권'과 주민 근접 '유망 골목상권' 육성 및 문화관광형 시장 확대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국고지원으로 발행규모 확대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로 사용 편의성 및 지방 우대 상품권 환급 행사로 소비 촉진

04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한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단부터 재기까지 원스톱 회복전담체제 구축
 - 경영 진단 후 선제 지원 및 폐업 후 취·재창업 촉진으로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 원활한 폐업 지원 및 재기 지원 시스템강화
 - 폐업자 취업교육 확대 및 재도전 금융지원 강화
- 소상공인 영업 활동 모든 단계 규제 개선
-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간 상생협력 제도화
- 폐업 등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부담 완화
 -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노란우산 해지 일시금 제외 추진

AI 등 혁신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창업) '모두의 창업'을 통한 기술과 혁신 아이디어 창업 확대**
 - 창의적 아이디어나 기술 기반 창업의 지원
 - 지역 특색과 자원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아이디어 보유자를 위한 지원 제도 도입
- **(성장) 기술사업성·역량 등에 기반한 정책보증 지원**
 - 신용·담보가 부족해도 장기자금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확대
 - 딥테크(바이오·반도체 등) 맞춤형 보증 신설 및 유동화보증(P-CBO) 등 연계 지원
- **(상장) 혁신벤처기업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제도 구축**
 - 첨단기술 특성을 반영한 기술가치평가·상장심사방안 마련
 - 상장 전부터 투자하여 상장 이후까지 장기투자하는 코너스톤 제도 도입

일자리 창출의 중심을 창업으로 전환하여 국가 창업시대를 열겠습니다

- 국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오디션 형식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한 기술창업가 발굴
-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해 성장단계별로 집중투자하는 프로젝트 추진
- 기업이 정신의 전방위 확산을 위한 국가차원의 벤처 컨트롤타워 구축
- 여성벤처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벤처펀드 예산 확대
- 신산업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 회생 인가 중소기업 정상화를 위한 전담 지원 체제 구축 추진
- 실패 경험이 재도전의 자산이 되도록 재도전생태계 구축 강화

연간 40조원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연간 40조원 벤처투자 시장 육성
 - 모태펀드 존속기간연장 및 예산 대폭 확대
-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및 위험 분산 투자방식 등 가이드라인 마련
- 법인투자자가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시 세액공제 확대
- 모험자본 조달, 기술거래, M&A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개편
 - 보증·대출·투자 등 정책금융과 기술평가, M&A, R&D 등 기술혁신 지원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제값 받는 공정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중소기업자들의 단체협상을 위한 공동행위 허용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 예외 인정)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 우려 불식 및 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거래조건 등 단체협상 요청권 부여
 -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 힘의 불균형 해소 및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거래기반 확보
- 지역 중소기업 정책에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참여 확대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역량 강화 및 지역 주력산업 육성 시 참여 기회 확대
 - 지방정부 및 지방 협동조합 특성을 반영한 공동사업 일자리, 협업, R&D 등 지원

격차 해소와 상생으로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겠습니다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예산 확대로 대기업 수준의 복지혜택 제공
 - 마일리지 혜택 강화 및 결제수단 확대, 대기업 제품 등 다양한 구매 혜택 강화
- 중소기업 재직자 주택특별공급 지원 확대
-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내일채움공제·우대저축공제 프로그램에 지방정부 협업 추진
-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으로 중소기업 자금 접근성 제고·금융기관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유도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교통비 지급 및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확대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장 및 감면한도 확대 추진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과 수출증대로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확대와 종합적인 마케팅 역량 강화
 -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을 「판로지원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 확대
 - 중소·벤처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 위한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추진
- 중소·벤처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등 혁신 촉진을 위해 (가칭)「중소유통업 혁신 촉진법」 제정 추진
- M&A 방식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칭)「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가칭)「중소기업 ESG 대응력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 추진
 - 탄소중립 추진계획, 탄소감축 지원사업, 업종별 공동 R&D, 세제혜택 등 도입
 - 중소기업 에너지 저소비 및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사업 확대
- 중소기업 재해 보상을 위한 민관 협력의 정책 보험 도입 추진

II

R&D와 AI 제조 혁신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공의 성과가 사업화로 확산되는 한국형 기술이전 사업화(STTR*) 추진

* ST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미국 연방정부의 대학, 국립연구소 등과
중소기업 간 협업한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 「중소기업AI 활용 확산·촉진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의 AI 경쟁력 강화

- 지역 주도형 중소기업 AI 기반 구축 및 중소기업 맞춤형 AI 활용 촉진
- 중소기업의 AI 활용 시 데이터 확보 권한 부여 및 규제 해소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 스마트제조혁신 국가 도약을 위한 지능형·자율형 공장 육성
-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
- 탄소중립 팩토리, 안전한 휴먼팩토리 등 스마트공장 3.0 추진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생태계 구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금형·열처리·주조 등 국가핵심 제조뿌리산업 지원 강화

- 뿌리산업 예산 확대 및 에너지비용 부담완화 등 지원
- 공정자동화·지능화 등 스마트화 지원, 현장인력 부족 애로 해소

II.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00개 공약

4. 민생안정·공정사회

1) 촘촘한 국민생활 안정 지원

2) 아동·어르신 등 돌봄지원·저출생고령화 대응

3) 노동·권리보장·공정사회 확립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고품질 공공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 공공주택의 입지·품질 개선 및 면적 확대
 - 영구·국민임대 주택의 재정비 및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
 - 청년·신혼부부·노년층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돌봄서비스 특화 주택)
 - 공공임대 주택 공급로드맵 법정화 추진
- **임대단지 내 노후 사회복지관 정밀안전진단 지원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
-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및 지급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여 주거취약계층 보호 강화**
- **폭염, 한파에도 주거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냉난방 지원 강화**
 - 중앙난방·개별난방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
 - 현재 진행 중인 LH 노후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차질 없이 추진
- **쪽방촌 등 주거 취약계층 해소 위한 대책 마련**
 -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유도주거기준' 활성화
 -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위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
- **지방정부별 1인가구 주거지원센터 운영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주택리츠' 확대**
 - 리츠회사 주식을 계약금으로 활용, 초기 월세 세액공제 적용 및 리츠 주식 추가 확보로 주택 소유권 확보
- **'공실폭탄' 방지 위해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 추진**
- **공공성 강화의 원칙 하에 민간 재개발 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추진**
- **신축수요에 방해되는 고분양가 문제 해소 위한 방안 마련**
 - 주택공급 신속인허가 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절감한 사업비를 분양가 인하로 유도
 -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공사비분쟁 조정 포함 등 공사비 투명성 담보
-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동의율 완화 및 초기 사업비 지원을 위한 저리융자정책 도입 등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 **광역지방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정 권한 중 일정 세대 수 이하의 경우 자치구에 위임하여 정비사업 속도 제고**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정, 차질 없는 공급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27만호, 총 135만호 규모의 신규주택 착공 차질 없이 추진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대
 -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노후시설 유희부지 재정비,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차질 없는 공급 추진
 - '인허가'가 아닌 '착공' 중심 공급 물량 확보로 공급 체감도 상승
- 선호도 높은 도심 지역(교통·일자리·문화시설 인근)에 2030년까지 차질 없이 6만호 공급 추진
 - 선호지역 내 추가적인 공급부지 발굴 및 지속적 주택 공급 추진
- '안전하고 불편없는' 살고 싶은 주택을 위한 층간소음·아파트 사전하자 문제 해소
 -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및 소음저감시설 설치 등 확대
 - 신축 공동주택 사전하자 문제 해결

서민 울리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치로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 국토부·행안부·금융위·국세청 등 부동산 감독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에 대한 기획·총괄·조정
 - 감독원 내 부동산감독협의회 설치로 부동산 중복조사 방지

05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최소보증금* 도입으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

* 최소보증금: 경매매 종료 후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 일정비율 미달 시 그 차액을 지원

■ 전세사기 예방 위한 관련법 재정비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전세사기 걱정 없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제도' 개선

- 임차인·임대인에게 부담 없는 누구나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보험제도 체계 마련

■ 전세보증금 매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 도입

06

청소년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청소년 건강증진 및 마음 돌봄 정책 강화

-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체험활동 지원 강화
-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중앙·광역 상담 연계 및 112·119 핫라인 구축

■ 이주배경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대상 확대 특례 마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지원(기초학습·진로설계) 강화

■ 이주배경 가족 전담관리사 시범운영 확대

쌀값 정상화·농산물 유통 개혁·공익직불금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논 타작물재배를 확대하고 식량작물의 적정가격 유지
 - 과감한 인센티브와 식량위기 시 비상대응 가능한 방식으로 선제적 쌀 생산조정
-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유통개혁 추진
 - 농축산 디지털 유통 플랫폼, 산지경매 등 산지유통혁신, 도매시장의 공공성 평가관리 강화, 농협 등 품목별 생산자조직 역할·기능 강화 등 추진
 - 생산자단체에 농산물 수입쿼터 관리권 단계적 부여
- 공익직불금 확대
 - 기존 공익직불금 확대 개편: 전략작물직불(식량안보, 생산조정), 탄소중립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등
 - 신규 공익직불금 도입: 가격안정, 청년농업인 지원, 기후변화적응 지원, 경축순환, 동물복지 등

선진국형 농가소득망 및 농업재해 안전망을 도입하겠습니다

-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제를 도입하고 수입안정보험과 병행하여 농가 경영안정
 - (가격안정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기초 안전망
 - (수입안정보험) 품목별 기준수입보다 하락 시 손실 일부 보전하는 보험
-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및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재보험수준으로 강화
 - (재해대책) 피해복구 범위 확대 및 지원단가 실거래가로 상향, 비보험품목 피해보전
 - (재해보험) 할증 최소화 및 국가지원 확대, 보상범위와 보상률 강화
 - (기후재난지원금) 거대 재해 발생으로 심각한 피해 시 재난지원금 지급
- 생산비 급등에 따른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 비료·사료값 상승, 유가·전기료 급등 등 농업생산비 급등에 대한 가격인상분 일부 지원
 - 통합형 농자재구매 지원사업 추진(현금성 지원 방식, 농자재보조사업 통합)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및 공공비축농지를 확대하여 영농 세대교체를 이루겠습니다

-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으로 노후 대비 및 영농 세대교체
- 고령농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하여 청년 등 영농 세대교체
 - 고령농의 은퇴와 영농 세대교체를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단가 인상 등 개선
 - 은퇴농의 농지는 인접 농업인·청년농·친환경농 등에 우선 제공
- 농생명용지 조기 개발, 농지의 규모화·집적화 및 공공비축농지 확대로 농업 혁신
 - 공공임대용농지매입 규모를 확대하여 급격한 농지가격 하락 방지, 농지보전총량제 도입
 - 주민참여형 농지 규모화·집적화,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 및 관리 강화 등 농지의 소유·이용·보전·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농지관리기구 설치
 - 공공비축농지 확대로 식량안보·기후대응·수급조절·세대교체·재생에너지 등 농업 혁신 추진

어업구조 혁신을 통해 어업생산성을 확대하겠습니다

- 수산자원 대비 과도한 어선세력(기후변화 고영향 업종 중심)을 집중감축하여 생산성 제고
 - 잔존 어선 대형화·현대화를 통해 기상 대응능력(어선사고 저감) 제고, 전체 어획량은 유지·회복 강화
 - 총허용어획량제도 확대에 맞춰 불필요 투입규제를 조정·철폐하여 어장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
- 재해 상습 피해해역을 기후변화 적응해역(관리·특별)으로 지정하고, 자력회복 가능성을 평가하여 회복·폐업 등 지원·관리
 - (관리해역 양식장) 3년간 입식·시설량 조절, 면허 재배치 등 이행 → 평가 후 회복 여부 결정
 - (특별해역 양식장) 회복하지 못한 양식장은 2년 이내에 양식업 폐업 실시 (폐업지원금 지급)
-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어업 이상기온 대응대책 마련
 - 양식어류의 조기 긴급방류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확대

11

암 치료 경험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암 치료 경험자의 '일-치료 병행' 지원
- 암 치료 경험자의 '가정' 지원
 - 항암치료를 앞둔 부부에 대한 난임시술비 지원 추진, 암 치료 경험자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이용 기준 마련
- 치료를 위한 유방 재건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12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동네 한의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훈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의원의 보훈의료 참여 기회 제공
 - 이동이 어려운 고령 국가유공자 및 의료 소외지역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한의원 위탁 병원 지정 추진
- 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협업 관리체계 구축에 한의원 활용 검토
 - 고령층이 선호하는 동네 한의원에 건강상담 거점 역할 부여

13

모두가 행복한 배달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 배달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

- 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 대상 우대수수료제 도입 검토 등 배달앱 수수료 정상화 노력

■ 배달종사자 처우 개선, 안전 배달문화 조성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을 플랫폼 배달 노동자까지 확대 개편

■ 공공배달앱 경쟁력 제고로 소상공인 부담, 소비자 외식비용 절감

- 지방정부·지역화폐 등과 연계하여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공공배달앱 추가 할인 혜택 제공

■ 플라스틱 사용 저감 참여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마련

- 다회용기 세척 서비스 지원, 친환경 포장재 사용 지원 등

14

믿을 수 있는 상조시장을 만들겠습니다

■ 고객이 맡긴 돈(선수금)을 대주주가 함부로 유용할 수 없도록 운용규제 강화

- 채무보증, 지배주주 이익제공 등 자산운용 금지행위 신설
- 자산건전성 저해행위, 신용공여, 영향력 행사를 위한 탈법 행위 금지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시스템 강화

- 가입정보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시스템' 구축
- 폐업 등 피해보상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시도지사 공고 절차 마련

체육시설업의 예기치 못한 폐업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 헬스장 등 국민 밀집 체육시설업의 신고 종목 확대
- 폐업 통지 의무화 기간 확대
 - (현) 폐업 전 14일 → (개정) 폐업 전 30일
- 소비자 피해 구제 지원 강화
 - 신속 상담 및 환불 처리 지원 체계 구축

문화예술의 창작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확대
 -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확대 및 체불수입 보장 방안 마련
- 예술인 창작지원 확대
 - 청년·장애 예술인 지원 확대 및 기성 예술인 창작 지원
 - 창작공간 임대 확대 및 공공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 지역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선
 - 장르별 지역 유통플랫폼 지원
 - 보조금 정산 간소화 및 소액 사업의 자부담 폐지 추진

전문체육인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전문체육인 복지 강화

- 체육인 공제 사업 추진 및 자녀돌봄센터 조성
- 고용·산재보험 적용방안 마련 추진

■ 전문체육 인재개발 지원

- 저소득층 학생선수 지원 확대
- 맞춤형 재교육, 취·창업 등 통합시스템 구축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반려동물 보호·의료 및 책임 관리체계 강화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보험 활성화 등을 통한 양육비 부담 완화,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진료소 확대 등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강화
- 지방정부 지원 동물병원, 찾아가는 동물병원 확대 등 인프라 확충 및 중성화수술 지원 확대
-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 등을 통한 동물 학대 근절 및 기본소양 교육 등 책임양육 강화
- 대규모 생산 금지 및 관리·감독 강화, 유사 동물보호시설 규제, 지방정부 동물보호센터 확대 등 반려동물의 생산·유통·보호체계 개선
- 길고양이, 마당개 동물복지 특별대책 추진

■ 비반려동물의 동물복지 수준 제고

- (농장동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확대, 지방정부 공공급식에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사용 확대, 동물복지직불제 도입 등을 통한 농장동물 복지 개선
- (전시동물) 동물원·수족관 동물복지 개선, 공영동물원에 야생동물보호시설 설치
- (실험·봉사동물)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통한 실험동물 희생 최소화, 국가봉사동물 관리체계 확립, 민간입양 지원 확대

■ 동물복지 법·제도 기반 확립

- 전체 동물을 포괄하는 동물복지 이념과 법적 지위 등을 반영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 동물복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집행 전담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 동물복지 관련 갈등요인 조정을 위해 지방정부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

II.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00개 공약

4. 민생안정·공정사회

1) 촘촘한 국민생활 안정 지원

2) 아동·어르신 등 돌봄지원·저출생고령화 대응

3) 노동·권리보장·공정사회 확립

2) 아동·어르신 등 돌봄지원·저출생고령화 대응

01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아동수당 확대

- 기존 만 8세 미만까지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26년부터 매년 1세씩 늘려 13세까지 지급('26년 만 9세 미만 지급 → '30년 만 13세 미만 지급)
- 월 10만원인 수당액을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최대 2만원까지 추가 지급하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대 3만원까지 추가 지급

■ 난임·임산부·영유아 지원 강화

-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 지역모자의료센터 산모·신생아 통합진료 및 24시간 분만 기능 강화,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 이혼동이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확대 및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 아동 보호체계 강화

- 중앙정부·지방정부가 입양절차를 수행·관리하는 국가책임 입양체계 구축 및 보호 대상 아동 등에 대한 공공후견제 도입
- 아동학대 사망사건 심층분석 체계구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가정위탁을 국가사업 체계로 개편 및 보호대상아동 전 주기 원가정 복귀 지원 강화

■ 취약·위기 아동·청년 지원 강화

- 자립준비청년 지원수당 인상 및 맞춤형 사례관리 시행 등 지원 강화

02

국가가 책임지는 지방정부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을 추진하겠습니다

- 과밀학급·과대학교 등 돌봄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온동네 초등돌봄' 전국으로 확대
 - 아침 07:30분~9시, 방과후 오후 8시까지(방학 중 오전 8시~오후 8시) 운영
 - 학교와 지방정부 유휴공간 리모델링 활용, 지방정부가 돌봄교사 확충 및 운영 전반 전담(기존 돌봄교사는 교육청이 인건비 지원 및 관리 유지)
 - 친환경 급·간식 제공(방학 점심 포함), 지역 연계 우수 급식업체 활용
-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체계적이고 질 높은 돌봄교육 제공,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구성
 - 돌봄전담사 교실당 2명 배치(전일제 1명, 시간제 1명)
-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활용하여 보호자 인솔도우미·통학안전 지킴이 및 돌봄 보안관 배치

03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교육의 질은 높이겠습니다

- 초등학교부터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추진
 -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 다양한 특기적성·예체능·기초학력 프로그램 마련으로 학생·학부모 선택권 보장
- 지방정부·공공기관 협력체제로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체계적 운영
 - 지방정부·공공기관이 학교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사풀 제공하고 방과후학교 모니터링·컨설팅 등 교육의 질 관리 체계 마련으로 학교 부담 최소화
 - 학교별·지역별 특색 프로그램 지원 및 공유 시스템 구축
- 방과후학교 법적 근거 마련
 - 명실상부한 공교육 제도로써 방과후학교 위상 및 역할 강화
 - 기초학력 보장, 예체능교육 강화 등 방과후학교 목표 명시

04

무너지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 건강, 국가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

-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청 등 범부처 차원 비상대책 마련
- 향후 5년간 초·중등 전 학년 학생 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위기 학생에 대해 전문기관 연계, 검진·치료 시행
- 학교응급심리 지원교육, 교직원 심리회복 프로그램 등 학교위기 개입 지원 확대
-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1인 이상 의무화로 현장 대응력 강화

디지털 스트레스 및 중독 예방 지원

- SNS, 게임 등 디지털 과의존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디톡스·회복 프로그램 운영
- 자가진단형 디지털 스트레스 평가 도구 개발 및 상담 연계 시스템 구축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

-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기회 확대
- 초·중·고 체육(전담)교사 증원 및 체육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확대

아동·청소년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정서활동비 지원

05

학부모의 교육 참여 강화로 교육 공동체성과 교육자치를 강화하겠습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및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

-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적 기구화
- 학부모의 학교 교육 및 상담 참여 확대를 위한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 확대

자녀 성장 단계별 학부모 교육을 위해 학부모 지원센터 설립

-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진행
- 학부모 교육 지원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완화

- 부부 동시 수령 시 20% 감액하는 제도를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 노인일자리 확대 및 수당 인상

- 어르신 수요를 반영하여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균형 있게 확대
-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및 운영개선, 안전통학 지원 등 공익을 위해 우선 인력 배치가 필요한 일자리 지정제 도입

■ 치매 예방·대응 및 건강 지원 강화

- 전국 치매안심센터 치매 조기 진단 기능 강화, 미술·음악·놀이 치료프로그램 등을 통한 인지·심리정서 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 요양시설 및 경로당 등 노인시설 치매 예방·재활 프로그램 보급 확대
- 어르신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사업 단계적 확대

■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통한 안전한 재산 관리

-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맡아 관리하는 공공신탁제도를 '26년 시범사업을 거쳐 '27년 전면 도입
- 공공기관이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생활지원 서비스도 제공

■ 사회적 고립 대응 강화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및 일상회복패키지 지원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외로움) 대응 정책 추진
- 사회적 고립(외로움) 담당 차관 지정 등 정책 수행체계 마련

07

다자녀가구 가사지원서비스 바우처를 도입하여 가사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다자녀가구에 임신 후반기~자녀 양육기 동안 가사도우미가 방문하여 청소, 빨래, 식사준비 등 서비스를 제공
 - 고위험 임신부, 영아 가정, 맞벌이·한부모·장시간 노동 가구 우선 지원
- 부모가 원하는 시기 및 시간에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기존의 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설계

08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누구나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단기) 공공의료기관부터 지역거점병원, 상급종합병원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 (중장기) 수도권 쏠림 없는 병원제 도입 전환 추진
- 간병비 걱정 없는 요양병원 추진
 -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본인 부담 경감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어르신 등이 시설에 입원·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 입원·입소 경계 어르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증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으로 통합돌봄 대상 단계적 확대
 - 치료 따로, 돌봄 따로 분절적 서비스가 아닌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연계 지원
- **입원·입소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주거, 생활지원 관련 재가서비스 종합적 확충**
 - (기존 서비스 대상 및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방문의료, 장기요양 재가급여, 노인맞춤돌봄, 식사·이동 지원, 주거지원 서비스 등
 - (신규 서비스 도입) 퇴원환자 집중지원, 방문재활·영양, 노쇠예방관리, 생애말기 지원 서비스 등
- **통합돌봄을 위한 다양한 재가서비스 공급 인프라 지속 확충**
 - 기존 재가서비스 시설 확충과 함께 의료, 간호, 복지, 요양, 재활 등 다양한 전문인력의 통합돌봄 참여를 위한 신규 시설 제도와 추진
 - 공공의료기관, 사회서비스원 등 공공 인프라 확충 및 통합돌봄 참여 확대

어르신·장애인 등의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해결하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확충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 등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가족·지인과 수시로 교류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
 - 자녀와의 공동거주나 시설입소를 하지 않고도 자립적 생활 가능
- **일반적인 주거공간에서 의료, 돌봄,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을 도심지역에 확충**
 - 가정과 같은 환경의 주거공간을 독거 또는 부부 어르신 등에게 저렴한 가격에 기간별(단기~장기) 임대
 - 지원주택 내에 물리치료실·요양보호실을 설치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공동 식당·빨래방을 설치하여 일상생활 지원, 복지관·경로당을 설치하여 여가 활동 환경 조성
- **지원주택 유형 다양화 및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원주택 거주자격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으로 확대 추진
 - 장기요양 등급판정이나 병원 퇴원환자와 같은 요보호 대상자뿐만 아니라, 독거나 생활 불편 등의 사유로 시설입소를 고민하는 다양한 대상들도 거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11

저출생·고령화 사회, 신혼부부와 어르신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및 자녀수에 따른 분양권환급 감면 추진
-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 물량 확대 및 신혼부부 기간요건 기준 (현행 7년 → 10년까지)·소득요건 완화 등 추진
-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은퇴자마을) 구현으로 고령자 거주·균형발전 기반 조성
- 어르신 친화형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된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 추진 및 기존 주택 친환경 녹색건축·개조 지원

12

돌봄 개인예산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개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돌봄개인예산제 도입 추진
 - 돌봄서비스 수급권자에게 서비스급여액에 상응하는 예산을 배정하고 수급권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예산 총액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 수급권자가 자신의 필요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 및 물품을 이용하거나 구매
- 목적이나 성격이 유사한 돌봄서비스군(群)에 대해 우선 시범 실시하고 시범사업 평가 이후 개인예산제 단계적 시행 방안 마련

기능 전환을 통해 경영난에 처한 복지시설의 활로를 모색하고 부족한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 인구구조 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지역별 중장기 복지시설 수요를 파악하고
과잉 시설 정비 및 부족 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
- 과잉 시설 기능 전환을 통해 부족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마련
 - 어린이집 등 기능 전환 희망 복지시설을 수요도가 높은 재가서비스센터 등 노인
복지시설이나 마을도서관·키즈카페·돌봄센터·육아정보센터 등 아동·청소년
복지시설로 전환하는 계획 수립
 - 기존 시설 기능 전환과 함께 신규 시설 설치 병행을 통한 부족 시설 확충 추진
- 기능 전환 규제 완화 및 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II.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00개 공약

4. 민생안정·공정사회

1) 촘촘한 국민생활 안정 지원

2) 아동·어르신 등 돌봄지원·저출생고령화 대응

3) 노동·권리보장·공정사회 확립

01

AI·자동화 및 산업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 AI 전환 및 자동화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 실시 등 대응방안 마련

- AI 전환 및 자동화가 산업별 인력수급, 직무 변화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고용영향 사전평가 실시
-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구축 및 업종별·직업별 세부 고용안정 지원 방안 수립
- 노동자 평가·배치·해고 등 노동조건 관련 알고리즘에 대한 노동자의 설명요구·협의권 보장 등 (가칭) '노동분야 AI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확산

■ 산업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및 고용전환과 신산업 역량 개발

- 기업·소상공인 고용안정·연구개발·국내외판매지원, 실업 예방 및 실업자 생계유지·재취업, 신산업육성 및 투자유치 지원, 고용촉진사업자 지원 등
- 중소기업 직무전환 관련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확대

■ 정의로운 전환 시 사회적 대화 추진 및 지원

- 정의로운 전환 시 '지역고용노동심의회' 등 지역거버넌스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및 지원
- 석탄화력발전소 등 재편산업 지역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02

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을 제도화하고 생활임금을 확산하여 '노동 존중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 지방정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

-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지방정부 기능과 역할 재구성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 지방정부 고용 및 노동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정책(방침, 규정, 지침) 수립

■ 각 지방정부에 '독립된'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 확산

- '시·도' 단위에서부터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

■ 지방정부 생활임금 도입 확산 및 대상 확대

- 지방정부 생활임금 조례 확대
-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 및 민간도입기업 인센티브제 도입

03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역산업안전보건체계를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감축하겠습니다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법체계 구축

-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개편
-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의무 단계적 확대
- 영세중소 사업장의 산재예방 위한 화학물질 관리 AI 지원사업 추진

■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실효성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

- 건설업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의무화 및 공공기관 등 사내하청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 제조업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및 노동감독 중앙-지방 협업

* ①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②안전보건투자 규모, ③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및 차년도 활동계획 ④사고사망 등 산재발생현황 ⑤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계획 등을 공개

■ 산재보험 선 보장, 전 국민 산재보험, 신속처리 실현 등 산재보험제도 혁신

- 업무상 재해 조사기간 법정화 및 재해조사기간 초과 시 산재보험급여(요양·휴업급여) 우선 지급, 업무상 질병 추정제도 강화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04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노후소득 보장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 노·사 및 청년 등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협의를 통해 법정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면서 재고용 결합하여 국민연금 지급시기와 공백 최소화
- 법정 정년연장 시 범정부 지원체계 및 임금체계, 노동시간 개선 등에 대한 '노사자율합의' 지원체계 구축

■ 지역기반 재취업지원 체계 구축 및 중장년 생애경력 제도화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 확대 및 노동자 선택 중심 운영
- '중장년고용네트워크' 확대로 재취업지원서비스 특화지역 선정·지원 강화 (내일배움카드 지원 강화)
- 중장년 생애경력설계로 패러다임 전환 및 특화된 '경력개발센터' 단계적 인프라 확대·구축

■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및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자산배분 강화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을 특수고용·플랫폼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로 확대 개편
- 1년 미만 근속 노동자(계속근로 3개월 이상) 퇴직연금 적용 등 노후소득 보장방안 마련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일터 권리’를 보장해,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 5인미만 사업장 및 초단시간근로자 「노동관계법」 적용 범위 확대 및 사업주 지원

-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 공공부문 최소노동시간 보장 근로계약 체결 등 초단시간 노동계약 남용 방지 등과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시간에 비례하여 보장

■ 중간착취 방지를 위해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고용조건 및 환경 조성

- 균열일터 속 하도급·외주화·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의 구체적 기준 마련 및 입법 추진
- 파견근로계약에 파견수수료 명시 및 상한 설정 도입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정립과 공정한 보상 실현

-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 「근로기준법」에 규정 및 임금분포제 국가통계로 활용
-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적용되는 최저보수 방안 마련 및 시행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공공부문 초기업단위 자율교섭 체계 구축 및 집단교섭 모델 개발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민간부문 초기업 교섭 촉진·지원
- 국가 등에 의한 예산 지원이나 공공조달 진입 민간기업 대상 공공부문 초기업 교섭 모델을 활용 유도 방안 마련

■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업종·직무·직종 등이 유사한 단위 단체교섭을 통합하고,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노동위원회를 통한 초기업별 교섭단위 결정제도 및 초기업별 교섭 촉진제도 도입
- 지역적 구속력 제도 요건 완화 및 행정명령에 의한 효력확장제도 도입

■ 사회적 대화 강화 및 각종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의사결정구조에 노동계의 참여 보장

-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 지원을 통한 미조직 노동자 이해대변 확대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별·업종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
- 사업·사업장 내 노동자대표위원회 상설 제도와 및 각종 고용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위원회에 노·사의 실질적 참여 보장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OECD 평균 수준으로 노동시간 단축 실현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이행 및 과로사 및 야간노동을 포함한 장시간 노동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주 4.5일제 시범사업 확산,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노동시간 적용 제외·특례업종 제도 개선 등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연차휴가제 개선과 쉼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

- 연차휴가 저축제도 도입으로 노동자 선택에 의한 장기 연차휴가 등 자유로운 연차 사용
- 근무시간 외 SNS·이메일·전화·문자메세지 등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추진

육아·돌봄 국가보장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 저소득 노동자 출산전후휴가급여 프리미엄(추가급여) 추가 지급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육아수당 신설 및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위한 지원 강화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고 채무자 보호체계를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 기부금 및 휴면예금 운용수익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대한 지원 병행
- 금융거래이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의 비금융정보를 적극 반영하여 맞춤형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지속 추진

- 과잉추심 노출 가능성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등 상시 채무조정 제도 내실화

- 상환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취약채무자 사각지대 해소

권리보장 강화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 장애인권리보장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을 통한 장애인권리보장 증진
- 장애인복지 확충 중장기 로드맵 '2035 국가장애전략' 수립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장애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여 소득 보장 강화

- 종전의 3급 단일장애인까지 지급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및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로 노동권 강화

- 기업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신설 및 근로지원인 단계적 확대 등 추진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확대

■ 장애인주치의 제도 확대, 장애친화 의료인프라 등 건강관리 지원 확대로 건강권 보장 강화

-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대, 보조기기 지원 확대 및 전달체계 개선

■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이동권 보장 강화

- 특별교통수단 지방정부 통합 배치 시스템 고도화 등 상시이동지원체계 구축
- 이동편의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 통합학급 학생정원 감축, 학생 정원 대비 교사 인력 강화로 교육권 보장 확대

- 장애대학생 국가장학금 혜택 확대 및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추진 및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 기관 국비지원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및 지원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반 강화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장애인권익옹호 지원체계 강화

■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대상 확대 등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지원체계 구축 및 가족 돌봄 부담 완화 추진
-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동료지원 등 시설·서비스 확충 및 제도 개선

■ 여성장애인 다중 차별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 및 학업·노동·일상생활 등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체계 구축

■ 심터 확충 등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강화

개인정보 보호 강국이 되겠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

- 포렌식랩 등 기술 분석 인프라 확충
-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 등이 유출책임을 전반적으로 입증토록 해 법정 손해배상 책임 강화

■ 유출된 개인정보를 구매하거나 제공·유포하는 행위까지도 처벌 확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 조사 비협조,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로 조사 실효성 강화
- 정보 유출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보호조치 명령 도입

통합·특수교육 강화로 모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 특수교육 교실의 안전 강화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대
- 특수교사 및 보조 인력(특수교육 보조원 및 치료사) 확충
- 장애 학생의 도전 행동 대응 매뉴얼 개선(폭력 방지 및 교사 보호조치 마련)

■ 특수교사의 업무경감 및 지원 강화

- 행정지원 확대로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
- 교원지원청 내 특수교육 갈등조정 지원팀 운영
- 특수교육 교사 대상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도입

■ 통합교육 내실화

- 비장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강화
- 교원양성 과정에서 특수교육 관련 과목 이수 및 복수 전공 확대
- 지속적인 연수와 전문성 강화 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제도화

-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

12

누구나 차별 없는 ‘전 국민 미디어 향유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미디어교육 강화

-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이용 지원 및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확대

■ 장애인에 대한 방송접근권 보장 및 장애인 미디어 복지 강화

- 단말기 보급 확대, 자막·수어·화면해설방송 확대
- AI 기반 음성·자막 변환 서비스 지원

■ 지역 밀착형 및 지역주민 참여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지역·중소방송 활성화 적극 지원

- 지역방송사의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 지원 및 확대
- 공동체라디오 방송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활성화 지원

13

안전한 디지털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온라인상 정보·콘텐츠 건전성 제고와 AI 역기능 대응을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제체계 정비

- 디지털 성범죄물 및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의 신속 삭제·차단 제도 시행
-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을 통한 소비자 현혹 방지
- 딥페이크 탐지 등 AI 오남용 대응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스팸·피싱·스미싱 등 민생을 위협하는 디지털 역기능 해소

- 불법스팸·악성앱 차단체계 구축, 사설 불법 번호변작 중계기 이용 차단

■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 강화

-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등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불편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 SNS 과의존 예방 등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 마련

14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 부담을 키우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리베이트를 근절하겠습니다

- **특별사법경찰관 신속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갉아먹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 정상 의료기관과 다른 이상 진료·운영 신호를 선별 포착해, 신속히 적발하는 전문 특사경 체계 구축
 - 보건·금융·조세 당국 협력으로 불법 개설 구조를 끝까지 추적·차단
- **내부 신고자 보호 강화로 불법 사무장병원 원천 차단**
 - 의료인·종사자가 불법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진신고·내부고발 보호와 포상 대폭 확대
 - 불법 개설자에 집중한 처벌 실효성 강화 및 부당이득 신속 환수를 위한 법적 요건 정비
- **불법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과 공정한 보건의료 거래 질서 확립**
 - 보건복지부·국세청 다부처 협력으로 리베이트 제공·중개 등 불법 거래 구조를 주기적·집중 단속할 수 있는 체계 마련

15

기술탈취를 근절하여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특허법」 등에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제도) 도입하여 입증부담 완화**
- **범부처 협업으로 기술탈취근절 대응단 신설하여 기술보호 제도 개선**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피해 중소기업 구제 및 지원**
 - 피해 상담과 구제, 분쟁조정을 통합 지원하는 전담 추진 체계 강화
- **기술분쟁 시 증거 활용을 위한 중요자료 원본증명 등 기술임치 제도 활성화**
- **기술탈취 처벌 및 손해배상 강화**
 - 기술탈취에 직권 조사를 도입하고, 위법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 제재 강화
 - 손해배상액의 현실화를 위해 전문기관 촉탁 제도 도입
- **중소기업 사이버 보안 강화 및 중소기업 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물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국민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기본법」 제정 추진
- 택시운전자 근무환경 개선 및 택시업계 발전 지원
 - 노동시간에 상응하는 생활임금 보장으로 인력대란 해결, 통합전자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택시운전자 편의 제공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 자율주행택시 산업 대전환에 대비한 상생 대책 수립 및 택시호출플랫폼 활성화·공정화 실현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관련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 추진
 - 택시 고급화 및 낮은 택시의 교체사업 지원 확대
- 재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공적 정착 통해 화물운송업계 종사자의 안전 및 근로여건 개선
- 전세버스운송사업 표준운임제 도입 및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 '서민의 발' 필수 시외·고속버스 노선 지원 방안 마련 추진
- 대리운전자 권익 향상을 위한 관련법 제정
- 생활물류서비스 노동자의 근무 환경 및 생활물류시설 첨단화 지원 통해 노동 환경 개선
- 중고차 및 튜닝업계 육성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검토
- 저가항공업계 육성 및 안전관리 기반 조성 등 항공사업 경쟁력 강화

100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사회복지종사자 임금 인상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100% 달성
 -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도입 방안 마련
- 사회복지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 거주시설 인력 3교대제 및 이용시설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인력 추가 배치
 - 대체인력 지원 확대로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휴가·병가·경조사 보장 확대
 - 퇴직금 회피 위한 '쪼개기 고용 계약' 등 부당노동관행 근절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 지원 강화
 -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연수원 설치 추진

II.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00개 공약

5. 국가정상화·국민주권회복

1) 국가정상화·국민주권 실현

- 2) 여성 등 국민안전 강화
- 3) 한반도평화

1) 국가정상화·국민주권 실현

01

민주화 이후 39년,
성숙한 민주주의에 걸맞도록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분권의 헌법적 근거 마련
- 계엄 요건의 명확화, 엄격화

02

주민소환제 요건 개선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로
책임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 주민소환 요건 개선 등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확대

- 주민소환투표권자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 근거 마련
-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 및 확정·개표 요건 완화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해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03

국회의 자체 경비능력을 갖추고
국민대표의 윤리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회경비대의 국회 직속화 및 경비능력 강화

- 국회가 행정권력에 의해 침탈당하지 않도록 국회경비대 독립

■ 국회의원의 윤리성 통제 강화

- 국회윤리특위 상설화 및 윤리조사국 설립 추진
- 국회에서의 막말, 욕설에 대한 금전적 징계 신설

법조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공소청 제도 안착을 통한 검찰 개혁 완수

- 수사기관과 공소청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 판사가 임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 강화
- 국민참여재판 대상 재판 확대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 형사재판에서 간이공판 절차 적용범위 확대

차질 없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과 제도 안착을 통한 검찰개혁 완수

- 수사기관 상호 간 협력체계 및 중대범죄수사청 직제 등 마련
- 입주 청사 및 예산 확보 등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

06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법제도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국선변호사 보수체계 제도화
- 변호사 징계 권한을 법조윤리협의회로 이관하고, 법조윤리협의회 조직 개선
- 국선변호인의 조력 범위 확대
 - 형사사건은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조력
 -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민사사건에 한해 민사 국선변호인 시범 도입
- 사법절차의 공정성 확대
 - 진술녹취제도, 문서제출명령제도 등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시민참여 확대
 - 영장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07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범죄예방 통합체계 구축
 - 「범죄예방특별법」 제정
 - 고위험군 출소자 정보 관계기관 공유 및 보호수용 시설 확대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편 및 소년원 과밀해소
-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 교제폭력 사건 판결확정 전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고도화 등을 통한 원스톱 지원 추진
- 민생·금융범죄 근절
 -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와 연관된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 및 기소 전 몰수 보전 활성화
 - 범죄수익환수 국제공조 강화 등 불법이익 은닉 방지
- 마약류 중독 대응체계 확립
 - 마약류 중독자 재범 방지
 -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잠입수사, 위장수사 등 도입 추진

사회적 갈등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 공공갈등 및 사회적 논의 과제에 대한 참여와 소통 창구 마련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의제 설정, 시민참여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및 저변 확대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갈등관리 전문 인력 양성 추진
- 대규모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절차 마련

재정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국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정부의 국민참여예산 반영 촉진
 - 정부의 국민참여예산제도 적극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점검
 - 예산 심의 시 국민참여예산 여부를 명시하고 성과평가 시 적극 반영하도록 관리
- 국민참여예산 우수사례 포상
 - 우수 국민참여예산 참여 국민·부처·공무원 등 관계자 포상·홍보 추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고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역사부정 제재 방안 마련
 -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 또는 상징물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여 보호 및 관리조치 강화
-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연구·조사, 교육, 홍보, 기념사업 및 국제사회 연대 등 종합·체계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전시 성폭력 여성인권 문제와 국제사회 연대체계 강화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마민주항쟁, 3.15의거, 제주4.3사건 등 과거사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추진
-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추진

민주시민·경제금융·노동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학교 정규교육 내 민주시민·경제금융·노동인권교육 활성화

- 초·중·고등학교에서 경제와 금융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 및 교사 연수 확대
- 사회 현상에 대한 교실 내 토론 원칙을 정립하고 토론 교육 활성화
- 민주주의·노동인권·환경교육 강화
- 초·중·고 인문학 및 독서 교육 강화

■ 헌법교육 강화로 민주시민 육성

- 체험·토론형 헌법교육 프로그램 및 모의의회·모의헌법재판 프로그램 확대 지원
-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헌법교육 교사 연수 및 지원 확대

■ 교원의 시민기본권 회복

-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 활동 등 허용 추진
- 교권 보호 강화 및 교사 마음돌봄 휴가 신설

정치를 넘어 국민의 품으로, ‘미디어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위한 법·제도 시행

-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국민 중심으로 개편
-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통한 자유로운 제작 환경 조성
- 정치적 악용 소지가 있는 보도·논평의 공정성 심의조항 삭제

■ 공영방송 규율체계 정비를 통해 공영방송 발전의 구조적 기반 조성

-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도입하여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구체화
- 공적 재원의 적확한 산정·배분 및 관리체계 구축

■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의 신뢰성·투명성 확보

-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통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 마련, 팩트체크 육성 및 민간 팩트체크 활동 지원을 위한 투명성 센터 설치 등 제도 정비
- 확증편향 등 알고리즘 추천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하겠습니다

■ 인권위원장, 상임위원 선출 시 국민적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시민사회대표의 참여 보장

■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회에 대한 견제장치 도입

- 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 인권위원의 의무 및 징계 규칙 신설

■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5. 국가정상화·국민주권회복

1) 국가정상화·국민주권 실현

2) 여성 등 국민안전 강화

3) 한반도평화

01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재난관리법」
제정을 통해 재난에 대한 국가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 안전권을 명문화하는 등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마련 및 제도 안착
 - 안전사고 정보공개, 독립조사기구 설치, 기억과 추모 등 피해자권리보장 지원원칙 확립
- 재난유형별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강화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사회재난관리법」 제정 추진

02

재난 예방·대응 강화를 통해
주민안전을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 인파·산불·침수 대비 AI 기반 지능형 CCTV 확대
 - 특정재난 예측 모델 발굴·대응하기 위한 관제시스템 확대
 - AI 기반 홍수 및 도시침수 예보 확대
- 산불에 대비한 총력 재난 대응태세 확보
 - 산불진화자원 및 특수진화대 확대
 - 소방의 적극적인 산불진화 역할 확보
- 재난키트 다양화 등 재난피해 지원품목 확대
- 소방산업 고도화 및 첨단장비 활용 확대
 - 드론·로봇 등 첨단 소방장비 확대 및 AI 기반 119시스템 등 인프라 확충
 - 이동식 수조,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보강
- 소방관 전문성 제고를 통한 재난대응능력 강화
 - 드론 교육, 레펠 훈련 등 소방관 위탁교육 훈련 지원 확대

모두가 누리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성평등정책 거버넌스 강화

- 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한 성평등가족부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정책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전담부서 확대 설치

■ 중앙 성평등센터 신설 및 전문성 강화

- 성평등 교육, 문화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 지역 성평등센터 확대로 중앙·지역 유기적 정책 추진 강화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확대

- 현행 8개부처 운영 중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계적 확대
- 성평등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권리 강화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고도화

- 성별 임금 실태 체계적·종합적 공개
- 직종(직무), 직급, 근속연수, 고용형태별, 남녀 임금 비율, 임원 성별 등 공시 항목 구체화 및 명시적 규정

■ 공시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지방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경영정보 공개 통합체계 구축

■ 공시 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

- 상시근로자 기준 완화 및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으로 확대

대한민국을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보호의무 확대
 - 사람이 우선인 교통약자 보호 강화(스쿨존에서 통학로로 어린이 보호구역 선택과 집중, 노인 보호구역 정비 및 확대, 마을주민 보호구간 확대 및 아파트단지 등 도로 외 구역 안전 강화 등)
- 오토바이 전후방 번호판제 도입 추진
-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구매 시 지원 확대 등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마련
 -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전제로 택시바우처·정기예금 우대금리·지역화폐 지급·노인 일자리 가점 등 '고령자 이동권 보장 패키지' 제도 마련
- 안전한 전기차 활성화, 배터리 인증제 활성화 및 전기차 화재예방·진압장비 등 도입 확대
-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항공사 및 공항시설에 대한 항공안전투자·정비 등 점검 강화
 - 공항시설 내 버드스트라이크 위험요인 제거 및 항공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 보조배터리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방안 마련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현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 및 강화
- 소규모·영세사업장 배출 저감 지원사업 대폭 확대
- '스마트 클린 도시' 확대 조성
- 한중 대기질 개선 협력체계 점검 및 '아·태 다자 간 대기협정' 추진 등 국외 유입 문제 적극 대응
- 영유아, 아동, 노인 등이 이용하는 교육, 복지, 문화시설에 미세먼지 정화 식물 보급

‘응급실 뺑뺑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지역맞춤형으로 ‘치료 가능한 병원’을 즉시 연결하는 국가책임 응급의료체계 구축

- 권역응급의료기관의 중증 응급환자 최종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119부터 이송·전원까지 단절 없이 ‘치료 가능한 병원’이 즉시 지정되는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 지역별 응급의료 여건을 반영해, 시·도가 중심이 되어 소방·의료기관·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이송전원 원칙 설계

■ 응급의료·필수의료 인력 대폭 확충으로 ‘환자 적극 수용 응급실’ 구현

- 응급실 2인 1조 근무체계와 최종치료 상시 연계를 위한 필수의료 인력 기준 개편
- 응급·중증 진료에 대한 맞춤형 핀셋 보상 강화

■ 응급의료취약지 중증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국가책임 이송·외상체계 구축

- 장거리·취약지역에서 거리와 시간 때문에 치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역 거점 중심의 헬기 이송체계 확충
- 분산된 권역 외상센터 기능을 중증 거점 중심으로 재편·강화해 중증 외상환자 집중 치료 체계 확립

환자와 필수의료 모두를 살리는 의료사고 상생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의료사고 대응체계 구축

- 환자대변인·옴부즈맨·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사고 원인 설명, 분쟁 조정, 심리 회복까지 의료사고 대응 전 과정을 국가 제도로 보장
-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사고지원팀을 통해 국가가 환자와 의료진 간 중재 역할 수행

■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완화

- 의료사고에 대해 전문적·사전적 판단을 거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해 불필요한 수사 개시 방지
-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형사특례 부여

■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배상책임 체계’ 구축

-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로 환자 피해 신속 회복 및 의료진 경제적 부담 완화
- 필수의료 행위 전반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책임 확대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교제폭력 처벌 법제 마련

- 신체적·정서적 폭력, 경제적 통제 및 스토킹 등 다양한 교제폭력 유형화
- 교제폭력 피해자 중심 상담·주거·치료회복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 접근금지 제도 실효성 제고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시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알림경보 시스템 고도화

■ 가정폭력 사망범죄 심층분석 및 재발 방지

- 배우자, 연인, 파트너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사례 분석을 통해 구조적 요인 발굴 및 재발 방지
-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및 조건부 기소유예제 삭제 규정 마련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통합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유관 관계부처 협력체계 및 통합지원단 구성
-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온라인 신고창구' 운영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능 강화

-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속 삭제·모니터링 등 대응 제고 및 인력 확대
- 지역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광역단위 설치 및 전문성 강화

■ AI기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추적·차단 위한 자동 AI기반 시스템 고도화
- 딥페이크 'AI 사용표시(워터마크)' 안착화, 메타데이터(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정보) 보안 기술 강화

11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금융범죄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및 금융회사 무과실배상책임 도입 등 디지털금융 범죄에 대한 금융회사 책임 강화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여 범죄재발 방지
- 금융회사 해킹사고에 대한 과징금 상향조정 및 정보보호 공시제도 마련
- 불법리딩방 등 지능화·복잡화되는 미등록영업·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규율 강화

12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안심 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 AI로 지능화된 사이버위협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AI 기반 보안시스템 구축 추진
 - AI 기반 위협 탐지 시스템, AI 위협 공유체계 구축 등을 통한 탐지·공유 고도화
 - AI 기술을 이용하여 해킹을 선제 예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양자통신·보안 구축으로 국가 보안체계 강화
 - 핵심인프라의 양자암호통신 구축 및 양자내성암호 전환 지원
 - 양자인터넷 핵심기술 개발 지원
- 보안이 취약한 지역·중소기업 등 보안 사각지대 지원 강화
 -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확대
 -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서비스 도입 지원 등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역량 강화 지원
- 기업에 만연한 보안 불감증을 해소하고 엄정한 책임체계 정립
 -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 도입
 -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결과를 국민에 공개하는 제도 신설
 -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의 실효성 및 사후관리 강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 주도 배상을 추진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로 확대하고, 정부 관련 부처 협업으로 피해자 생애 전 주기 지원 추진
- 지역별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 강화
 - 지방정부별 화학사고 위험도를 산출해서 위험도에 맞는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 의무 부여
 -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보장강화 및 피해지원을 위한 안정적 자원 확보
-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환경호르몬 같은 심각한 독성물질의 신속한 퇴출 추진
- 불법유통 화학물질 관리 강화 추진
 - 불법유통 화학물질 관리와 화학사고 감시 예방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AI-IoT 활용 민원시스템 도입 추진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 국내에서 유통 중인 속눈썹 부착용 본드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효과적인 건설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마련
-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으로 건설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건설공사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전 과정에서 안전대책 강화
 -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설치
 - 건설산업 적정임금제 도입 및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적용
 - 건설근로자 불법고용 방지, 부실시공 사망사고 예방대책 강화
- 누감전 침수방지 등 건축물재난안전 인프라 강화
 -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기술과 로봇,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도로 위 암살자' 블랙아이스 예방을 위해 열선·그루빙·염수분사장치 설치 확대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활용을 통한 실시간 안전 정보 제공
- 반복되는 지하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 싱크홀, 포트홀 등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하안전 관리 점검 강화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확대 및 위험지역의 건축기준·시공방법 별도 마련
 -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한 전국 싱크홀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확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한 무장애도시 조성사업 확대

15

지방하천·저수지·소규모댐의 수질관리 강화를 통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고, 수생태계도 보호하겠습니다

- 지방에 있는 소규모댐, 저수지에 수질관리강화 및 응집침전제를 활용한 탁수 제거 시범사업 추진
 - 밭에서 유출되는 총인 등 비점(Non-Point)오염 관리 강화
 - 임야와 하천부지 불법경작 행위 단속 추진
 - 영동 지역 물부족 해결을 위해 도암댐 등 물부족 지역 우선 추진
- 하천의 흐름을 막고 물고기의 이동을 막는 소규모 보 철거 사업 지원 추진
- AI 활용 스마트상수도 및 하수도 운영·관리 의무화로 지방정부 예산 절감 및 좋은 물 공급 지원
- 낙동강 등 4대강 유입산단폐수, 미량유해화학물질과 축산폐수에 먹는 물 처리방식(오존, 활성탄)을 적용해 오염물질 대폭 차단

16

양육비 이행강화와 선지급제도 안착을 통해 돌봄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도 보편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완화 및 과도한 행정 절차 축소
 -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에 대한 소득요건 폐지로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양육 지원 강화
- 미성년 자녀 1인당 지원 지급액 상향
 - 현행 월 20만원 지원금 단계적 확대
- 양육비선지급제 회수율 제고 체계 강화
 - 양육비이행관리원 회수 전담 인력 확충 및 강제징수 전문팀 구성
 - 회수 업무 효율성을 위한 채권·수납관리 등 시스템 안정화 구축

II.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00개 공약

5. 국가정상화·국민주권회복

- 1) 국가정상화·국민주권 실현
- 2) 여성 등 국민안전 강화
- 3) 한반도평화

3) 한반도평화

01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를 증진하겠습니다

-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안보, 첨단기술(반도체·AI·우주), 에너지 협력을 포괄하는 호혜적 파트너십 구축
 - 한·미·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역내 평화 유지 및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대응 강화
- **한·중 '상호존중·실용주의' 기반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 정상 교류 및 전략적 소통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인적·문화적 교류 활성화
 - 민생분야 실질 협력 및 서해 등 우리 해양권익 확보 노력 지속
- **한·일 '서틀외교' 복원 및 미래지향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 공급망 안정, 디지털 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양국 공통의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공조 확대
 - 과거사 등 양국 간 현안 관련 우리의 원칙적 입장 견지하면서 진전 노력 지속
- **한·러 관계의 전략적 관리 및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
 - 북·러 밀착에 엄정 대응하되, 현지 우리 기업 보호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외교적 소통 채널 상시 가동
 -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틀 안에서 국익을 고려한 점진적 협력 동력 유지 및 한반도 정세 안정 도모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추구하겠습니다

- **한·미 공조 기반의 전략적 환경 조성 및 대화 모멘텀 확보**
 - 한·미 공조하에 조속한 북·미대화 재개 지원
 - 북·미대화 재개시 북·미대화·남북대화 상호 추동 구조 구축
- **주변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통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 한·중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
 - 한·러관계 복원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러측의 건설적 역할 견인
-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 모색**
 -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축소→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법 이행을 위한 한·미 간 협의 지속

평화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 종식**
 - 적대와 대결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
- **남북 간 교류·협력의 단계적 확대**
 -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 모색
-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관계 제도화 추진**
 - 남북 간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
 -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국제사회 기여와 책임외교를 통한 G7+ 외교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국익과 가치를 연계한 '전략적 ODA' 추진 및 원조 체계 고도화

- 대한민국 강점 분야(디지털, 그린, 보건)를 중심으로 ODA 우선순위를 재편하여 개발 도상국과의 상생협력 및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 마련
- 분절된 무상원조 시행 체계를 재정립하고 부처 간 협업 기능을 강화하여 원조의 효과성 및 투명성 극대화

■ K-공공외교 강화 및 청년 글로벌 진출 '기회의 사다리' 구축

- 재외공관을 K-컬처 수출 및 한국어 확산의 허브로 육성하고,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를 통해 국가 이미지 및 우호도 제고
- '청년 외교관·국제기구 파견 사업'을 확대하고, 지방 인재 할당제를 도입하여 지역 청년들에게 평등한 글로벌 역량 강화 기회 제공

■ 지방정부와 상생하는 기여 및 책임외교 구현

- 범정부-지방정부 통합체제 구축하여 공공외교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중복 방지와 외교적 시너지 극대화

700만 재외동포의 안전한 해외체류를 보장하고 영사 서비스를 국민 중심으로 혁신하겠습니다

■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 체계 구축

- 경찰청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해외 범죄 긴급 대응팀' 운영 및 재외공관의 범죄 예방 인력 보강
- AI 기반의 '차세대 해외 안전여행 플랫폼' 고도화 및 영사콜센터 서비스 강화

■ 국민 체감형 영사 행정 혁신 및 해외 진출 인프라 확대

- 워킹홀리데이·사증면제 협정 확대로 청년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공항 여권민원센터 등 권역별 여권 사무 거점 확충
- 디지털 영사 확인 서비스 전면 시행 및 모바일 여권 정보 민간 개방으로 서류 없는 편리한 행정 서비스 구현

■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및 동포 사회 맞춤형 지원 강화

- 우편 및 전자투표 도입, 순회투표소 도입, 투표시간 및 기간 연장 등으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확대
-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동포 전담 영사 배치를 통한 현지 권익 보호 사각지대 해소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겠습니다

-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경제특구 지정
 - 북한 인접 지역의 지방정부(인천, 경기, 강원)와 상시 협의·소통
- 실효성 있는 특구 지원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제도 마련

비무장지대(DMZ)를 국제 생태·평화 관광 협력지구로 개발하겠습니다

-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구간 재개방
 - 지난 정부에서 통제되었던 평화의길 비무장지대 내 일부 구간 재개방
- DMZ의 보전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국방·외교·법무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유엔사 협조체계 구축도 병행
- 비무장지대 일대를 국제 생태·평화 관광 협력지구로 개발하기 위한 여건 조성
 - DMZ 이남 국내 접경지역을 먼저 개발하고 남북공동 협력지구 사업으로 단계적 확대
- 무인기 불법비행 재발 방지 및 접경지역 평화안전 증진
 -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기 불법비행 처벌 상향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재발 방지
 - 접경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해결 방안 추진

지역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플러스 센터를
전국 7개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단계적으로 통일플러스 센터 설치 확대
 - 충청권, 영남권과 제주권을 포함하여 전국 7개 지역으로 확대
-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통일 관련 서비스 제공
 - 통일 관련 국민 참여·소통, 남북주민 통합, 통일공감대 형성 등 지역 수요 대응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으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 지원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임무에만 전념하는 군을 만들겠습니다

- 현행 3군체제를 해병대를 포함한 준4군체제로 개편
- 예비군 동원훈련(1~4년차) 기간 단축 및 예비군훈련보상비 현실화
- 군무원도 국방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초급 간부 자산 형성 지원 강화
- 군복무 중 진로탐색 및 자기개발 지원 강화
- 장기근속자에 대한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확대

곳곳에 산재된 현충시설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독립·호국·민주를 아우르는 현충시설 건립과 관리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 구축
- 만주 신흥무관학교 표지물 설치, 충칭 이동녕 선생 거주지 복원 등 추진
- 국외 사적지 전수조사 및 보존 관리 강화
- 주요 사적지 관광벨트 구축

III

5대 전환

1. 지방 주도 성장
2. 모두의 성장
3. 안전에 기반한 성장
4. 문화가 이끄는 성장
5.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5대 전환 정책 방향

지방 주도 성장

지방 행정통합 | 교통·주거·의료 등 생활기반 확충 | 첨단산업 확산

모두의 성장

중소·벤처기업 지원 | 공정경제 확립 | 창업 지원·소상공인 지원

안전에 기반한 성장

노동 현장의 안전 | 재난 대응 |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문화가 이끄는 성장

문화산업 육성 | 예체능인 지원 | K-푸드·관광산업 육성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남북관계 개선 | 북극항로 개척 | 경제안보 위한 실용 외교

III. 5대 전환

1. 지방 주도 성장



- ☑ 5극3특 완성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겠습니다
- ☑ 메가특구 지정 등으로 5극3특을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 5극3특 등 권역별 성장 자원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 ☑ 수도권은 더 빠르게! 전국은 더 가깝게!
전국에 균형잡힌 교통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 ☑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 ☑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방자치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혁신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 지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 지역·산업, AI를 만나 'AX(AI대전환) 대도약'을 시작합니다
- ☑ 초격차 AI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 ☑ 교육혁신으로 AI 인재양성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 지역 R&D자율성 강화로 지역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 ☑ 균형성장의 거점으로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 ☑ 지역주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습니다

III. 5대 전환

1. 지방 주도 성장



- ☑ 지역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겠습니다
- ☑ 벤처·스타트업을 지역의 성장엔진으로 만들겠습니다
- ☑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방주도 성장의 경제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 햇빛소득마을 조성, 농어촌 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농어촌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겠습니다
- ☑ 송전망 경과지역 지원 확대와 햇빛소득마을 제도화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전력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 분산에너지 특구와 RE100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산지소 기반
전력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 ☑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농림수산물분야 예산을 확대하며,
자치분권형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 농촌재생프로젝트로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삶터·일터·쉼터로 만들겠습니다
-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해 통합적 생태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 ☑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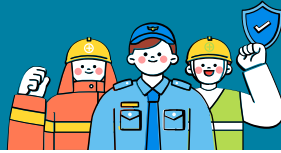
III. 5대 전환

2. 모두의 성장



- ☑ AI 등 혁신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 일자리 창출의 중심을 창업으로 전환하여 국가 창업시대를 열겠습니다
- ☑ 연간 40조원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 R&D와 AI 제조 혁신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과 수출증대로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하겠습니다
- ☑ 기술탈취를 근절하여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제값 받는 공정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 격차 해소와 상생으로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겠습니다
- ☑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 모두가 행복한 배달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3. 안전에 기반한 성장



-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역산업안전보건체계를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감축하겠습니다
- ☑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재난관리법」 제정을 통해 재난에 대한 국가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 ☑ 재난 예방·대응 강화를 통해 주민안전을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 ☑ 대한민국을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 ☑ '응급실 뺑뺑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 지방하천·저수지·소규모댐의 수질관리 강화를 통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고, 수생태계도 보호하겠습니다
- ☑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금융범죄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 ☑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통합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 안전한 디지털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안심 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 강국이 되겠습니다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 주도 배상을 추진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 문화가 이끄는 성장



- ☑ K-컬처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 ☑ 문화예술의 창작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 생활권 중심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일상 속의 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 ☑ 관광자원의 다각화로 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 ☑ 국가유산 보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 어촌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해양관광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 ☑ 스마트 농업 확산,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을 미래농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 K-관광의 거점, 지방공항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 생활스포츠 활성화로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겠습니다
- ☑ 전문체육인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III. 5대 전환

5.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 ☑ 평화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추구하겠습니다
- ☑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를 증진하겠습니다
- ☑ 국제사회 기여와 책임외교를 통한 G7+ 외교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실용경제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 ☑ 수출·통상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 ☑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 비무장지대(DMZ)를 국제 생태·평화 관광 협력지구로 개발하겠습니다
- ☑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겠습니다
- ☑ 지역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플러스 센터를 전국 7개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 북극항로 거점 항만 특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 녹색해운항로 구축으로 글로벌 친환경 규제에 따른 탄소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IV

대상별 공약

- | | |
|-----------|--------------|
| 1. 아동·청소년 | 8. 소상공인·자영업자 |
| 2. 청년 | 9. 중소벤처기업 |
| 3. 중장년 | 10. 농어업인 |
| 4. 어르신 | 11. 동물반려인 |
| 5. 여성 | 12. 투자자 |
| 6. 장애인 | 13. 군인 |
| 7. 직장인 | |

1. 아동·청소년



01 아동·청소년 복지·권리 강화

- ☑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으로 자산형성 지원
-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
- ☑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모두의 카드(K-패스)로 교통비 부담 완화
- ☑ 이주배경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 ☑ 주민소환투표권자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02 안전한 환경 조성

- ☑ '소아·분만 24시간 지역 책임체계' 구축
- ☑ 청소년 건강증진 및 마음 돌봄 정책 강화
- ☑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다층적 지원 체계 구축
- ☑ 디지털 스트레스 및 중독, 성범죄 피해 예방 지원
-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아동 보호체계 강화
- ☑ 고위험군 출소자 정보 관계기관 공유,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편 등 범죄예방 통합체계 구축
- ☑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어린이 등 보호의무 확대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

03 돌봄과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 ☑ 과밀학급·과대학교부터 '운동네 초등돌봄' 전국 확대
- ☑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질높은 돌봄·방과후교육 제공 등 방과후 학교 지원 확대
- ☑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와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청소년형 체육시설 확충
- ☑ 유치원·어린이집 지역별 급·간식비 격차 완화 추진

04 기초학력 보장체제 확립

- ☑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관리 체계 구축
- ☑ 기초학력 전문 교원 확충 등 학습안전망 지원 확대
- ☑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한 초·중·고 교육 혁신
-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및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

2. 청년

01 자산 형성 및 안전한 일자리 창출

- ☑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국민취업제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및 자발적 이직자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등 청년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강화
- ☑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 청년노후소득 보장 지원 확대
- ☑ 지방정부 청년수당 도입 전국적으로 확대 등 지역맞춤형 청년고용정책 추진
- ☑ 신산업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 ☑ 초급 간부 자산형성 지원강화
- ☑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의 적극적 운용 및 국민참여형펀드를 조성하여 기업성공의 과실을 국민들과 공유
- ☑ 청년을 위한 미디어 창업 허브 조성 및 창작 역량 지원 강화
- ☑ 청년농업인 예비농업인제도 및 연수제 도입,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확대 등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
- ☑ 청년 어촌 정착자금 지원 등 청년어업인 지원 확대
- ☑ 주 4.5일제 시범사업 확산,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등 OECD 평균 수준으로 노동시간 단축 실현

02 청년의 행정 참여 및 미래대비 지원 확대

- ☑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시스템 강화
- ☑ AI 대학원전문대학원·연구기관 확대 및 AI융복합 학위 과정 증설 등 청년을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로 양성

- ☑ 이공계 학부·석·박사·신진연구자에 대한 전 주기적 지원 강화
- ☑ 군복무 중 진로탐색 및 자기개발 지원 강화

03 안정된 주거 및 출산·육아환경 조성

- ☑ 1인가구·청년이 살고 싶은 '직주근접(직장과 주거가 근접) 슬세권(슬리퍼+역세권)' 주거복합플랫폼주택 확대 조성
- ☑ 공유주거 확대 등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 및 주거지원
- ☑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완화
- ☑ '생애 첫 독립' 1인가구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주거설계지원 사업 추진
- ☑ 원룸·오피스텔 등 '깜깜이 관리비' 방지
- ☑ 아동수당 인상, 난임·임산부·영유아 지원 강화, 다자녀가구 가사지원서비스 바우처 도입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을 조성
- ☑ '소아·분만 24시간 지역 책임체계' 구축

04 생활비 경감

- ☑ 지역맞춤형 청년구직비용 부담완화
- ☑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모두의 카드(K-패스)로 교통비 부담 완화
- ☑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확대
- ☑ 예비군 동원훈련(1~4년차) 기간 단축 및 예비군훈련보상비 현실화

2. 청년

05 여가생활 확대

- ✓ 청년 대상 문화바우처 제공 확대
- ✓ 문화·체육 등 편의시설 갖춘 청년이 머물고 싶은 문화·융합형 산업단지 조성
- ✓ 국가산업단지 문화가 있는 날 실시 및 지원
- ✓ 산업단지 교통인프라 확충 및 교통비 지원

06 안전망 강화

- ✓ 시설보호 종료 청년 사회정착 지원 강화
-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령정비 및 가해자 처벌강화
- ✓ 체육시설업의 예기치 못한 폐업 피해 방지
- ✓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및 디지털금융범죄 책임성 강화
- ✓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견적' 투명화로 결혼 준비 과정 피해 해소

3. 중장년

01 경제적 소득·일자리 기반 확충

- ✓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 ✓ 지역기반 재취업지원 체계 구축 및 중장년 생애경력 제도화
- ✓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및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 ✓ 국가첨단전략산업 자금공급 확대 및 기업성공의 과실을 국민들과 공유
- ✓ 소상공인 재기 프로젝트

02 자녀양육 부담 완화

- ✓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 ✓ 교복가격 상한가 설정
- ✓ 장병 복무여건 개선

03 부모부양 및 노후부담 완화

- ✓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
- ✓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 ✓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보장

04 의료 및 위험 대응 강화

- ✓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확립
- ✓ 암 치료 경험자 일상회복 지원
- ✓ 기후보험 3종 세트 도입
- ✓ 군복무 장기근속자에 대한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확대

05 생활안정 및 시장신뢰 제고

- ✓ 촘촘한 주거 복지망 구축
- ✓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모두의 카드(K-패스)로 교통비 부담 완화
- ✓ 믿을 수 있는 상조시장 조성
- ✓ 체육시설 폐업에 따른 피해 방지

4. 어르신

01 건강한 생활

- ✓ 치매 예방 대응 및 건강 지원 강화
- ✓ 암치료 경험자의 일상회복 지원
-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 ✓ 노인 중증호흡기질환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예방적 치료 체계 강화
- ✓ 누구나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 간병비 걱정 없는 요양병원 추진
-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 사회적 고립 대응 강화
- ✓ 어르신이 시설에 입원·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02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 ✓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수당 인상
- ✓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통한 안전한 어르신 재산 관리
- ✓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완화
- ✓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으로 노후 대비 및 영농 세대교체
- ✓ 고경력 은퇴자 대상 R&D 혁신활동 참여 프로그램 확대
- ✓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모두의 카드(K-패스)로 교통비 부담 완화

03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 ✓ 기후보험제도 도입(수혜자에 고령 어르신 포함)
- ✓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금융범죄 발본색원
- ✓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 등 교통약자 보호 강화
- ✓ 선수금 운용규제 강화, 정보제공 시스템 강화 등 신뢰할 수 있는 상조시장 조성

04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생활

- ✓ 어르신 대상 문화바우처 제공 확대
- ✓ 돌봄시설·요양시설 방문형 문화예술 서비스 도입
- ✓ 어르신형 지역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시설이용 지원 확대

05 주거와 돌봄이 통합된 편안한 생활

- ✓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해결하는 지원주택 확충
- ✓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된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
- ✓ 과잉시설 기능 전환을 통해 부족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5. 여성

01 성평등 사회 조성

- ☑ 성평등가족부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등 성평등정책 거버넌스 강화
- ☑ 중앙 성평등센터 신설 및 전문성 강화
-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확대
- ☑ 일본군 '위안부' 등 전시 성폭력 여성인권 문제의 연구·조사,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고 국제사회 연대체계를 강화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02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 ☑ 공공기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고도화
- ☑ 여성 자영업자 육아휴직 지원 등 육아·돌봄 국가보장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 ☑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지위 인정,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 등
- ☑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없는 연구 지속을 위해서 연구전문직(Staff Scientist) 활용과 대체인력 유형 다각화 등 대책 도입

03 여성의 안전 강화

- ☑ 교제폭력 사건 판결확정 전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등 교제 폭력 처벌 법제 마련,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접근금지 제도 실효성 제고
- ☑ 가정폭력 사망범죄 심층분석 및 재발 방지
- ☑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기능 강화, AI기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 ☑ 양육비 이행강화와 선지급제도 안착

6. 장애인

01 장애인권리보장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 ☑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
- ☑ 장애인복지 확충 중장기 로드맵 '2035 국가장애인전략' 수립

02 이동권 보장 확대

- ☑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이동권 보장 강화
- ☑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장애인 등 보호의무 확대

03 교육권 보장 확대

- ☑ 통합학급 학생정원 감축, 학생 정원 대비 교사 인력 강화, 통합교육 내실화로 교육권 보장 확대
- ☑ 특수학교·특수학급 확대, 특수교사 및 보조 인력 확충, 장애 학생의 도전 행동 대응 매뉴얼 개선 등 특수교육 교실의 안전 강화
- ☑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제도화

04 소득고용 보장 확대

-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장애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여 소득 보장 강화
-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및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로 노동권 강화

6. 장애인

05 건강권 보장 확대

- ☑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중증장애인 등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
- ☑ 장애인주치의 제도 확대, 장애친화 의료인프라 등 건강관리 지원 확대
- ☑ 쉼터 확충 등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강화

06 문화·체육 및 정보 접근권 보장 강화

- ☑ 장애인 대상의 문화이용권 확대 및 장애인형 체육시설 확충
- ☑ 자막·수어·화면해설방송 확대, AI 기반 음성·자막 변환 서비스 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방송접근권 보장 및 장애인 미디어 복지 강화

07 지역사회 자립 및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지원 확대

-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및 지원주택 공급 확대
-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
-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장애인권익옹호 지원체계 강화
- ☑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지원체계 구축 및 가족 돌봄 부담 완화 추진
- ☑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동료지원 등 시설·서비스 확충

08 여성장애인 차별개선

- ☑ 여성장애인 다중 차별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09 경계선지능인 지원

- ☑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 학업·노동·일상생활 등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체계 구축

7. 직장인

01 실노동시간 단축, 행복한 일터 구현, 휴식·재충전 지원

- ☑ OECD 평균 수준으로 노동시간 단축 실현
- ☑ 연차휴가제 개선과 쉼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
- ☑ 육아·돌봄 국가보장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 ☑ 근로자 휴가 지원 확대 및 지역사랑 휴가 지원

02 정년 연장 및 노후소득 보장

- ☑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 ☑ 지역기반 재취업지원 체계 구축 및 중장년 생애경력 제도화
- ☑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및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03 직장의 안정망 강화

-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법체계 구축
- ☑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
- ☑ 산재보험 선 보장, 전 국민 산재보험, 신속처리 실현 등 산재보험제도 혁신

04 '일터 권리' 및 노동기본권 보장

- ☑ 5인미만 사업장 및 초단시간근로자 「노동관계법」 적용 범위 확대 및 사업주 지원

- ☑ 중간착취 방지를 위해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고용조건 및 환경 조성
-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정립과 공정한 보상 실현
- ☑ 공공부문 초기업단위 자율교섭 체계 구축 및 집단교섭 모델 개발
- ☑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업종·직무·직종 등이 유사한 단위 단체교섭 통합,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 사회적 대화 강화 및 각종 중앙정부·지방정부 의사결정구조에 노동계 참여 보장

05 AI·자동화 및 산업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전환 추진

- ☑ AI 전환 및 자동화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 실시 등 대응방안 마련
- ☑ 산업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및 고용전환과 신산업 역량 개발
- ☑ 정의로운 전환 시 사회적 대화 추진 및 지원

06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제도화 및 생활임금 확산

- ☑ 지방정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
- ☑ 각 지방정부에 '독립된'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 확산
- ☑ 지방정부 생활임금 도입 확산 및 대상 확대

8. 소상공인 · 자영업자

01 소비 · 민생경제 활성화로 매출증대 지원

-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국고지원으로 발행규모 확대
-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지방 우대 상품권 환급 행사로 소비 촉진
- ☑ 외국 관광객이 K-문화를 체험하는 '글로벌상권'과 주민 근접 '유망 골목상권' 육성 등 앵커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02 사회안전망 강화

- ☑ 기후보험제도 도입(수혜자에 전통시장 · 소상공인 포함)
-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육아수당 신설 및 여성 자영업자 육아휴직 지원 추진
- ☑ 범죄예방 물품 지원, 경찰청 연계 안심콜 등 여성 소상공인 안전 강화
- ☑ 자영업자들이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확대

03 경영부담 완화

- ☑ 소상공인 오픈 바우처를 발행하여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보험 등 납부 시 활용
- ☑ 상가 관리비내역 공개의무 등 투명성 강화 및 관리비 꼼수 인상 방지
- ☑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신설 및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 ☑ 화재공제 가입대상을 전통시장에서 상점가와 골목시장으로 확대
- ☑ 소상공인 대상 단계별 AX·DX 지원 확대
- ☑ 광역형 소공인 도제교육센터·스마트 공방을 확대하여 소공인 디지털 전환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 배달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 및 배달종사자 처우 개선,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
- ☑ 공공배달앱 경쟁력 제고로 소상공인 부담, 소비자 외식비용 절감
- ☑ 플라스틱 사용 저감 참여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마련

04 금융부담 완화

- ☑ 저금리 대환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 ☑ 소상공인·자영업자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확대
- ☑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 ☑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 추진
- ☑ 금융기관 출연 등 지역신보 보증재원 안정적 확보 추진

05 폐업 및 재도전 지원

- ☑ 한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단부터 재기까지 원스톱 회복전담체제 구축
- ☑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 원활한 폐업 지원 및 재기 지원시스템 강화
- ☑ 소상공인 영업 활동 모든 단계 규제 개선
- ☑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제도화
- ☑ 폐업 등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부담 완화

9. 중소벤처기업

01 벤처·창업 활성화

- ✓ 국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오디션 형식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한 기술창업가 발굴
- ✓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해 성장단계별로 집중투자하는 프로젝트 추진
- ✓ 여성벤처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벤처펀드 예산 확대
- ✓ 신산업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 ✓ '모두의 창업'을 통한 기술과 혁신 아이디어 창업 확대
- ✓ 기술사업성·역량 등에 기반한 정책보증 지원
- ✓ 혁신벤처기업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제도 구축

02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 ✓ 연간 40조원 벤처투자 시장 육성
- ✓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및 위험 분산 투자방식 등 가이드라인 마련
- ✓ 법인투자자가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시 세액공제 확대
- ✓ 모험자본 조달, 기술거래, M&A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개편

03 벤처·스타트업을 지역의 성장엔진으로 육성 및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 기술혁신 인재·지역 성장동력 산업을 토대로 '창업도시'를 선정하여 창업생태계 확충
- ✓ 지역 유니콘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지역성장펀드' 조성하고, 일반 모태자펀드의 지역투자 의무 비율 도입
- ✓ 비수도권 엔젤투자허브 구축 확대 등을 통해 지역 혁신 스타트업 투자 확대

- ✓ 지역의 관광·문화 자원을 활용한 로컬 창업 기업을 발굴 육성
- ✓ 수도권 중소기업 지방 이전 시 조세지원의 범위를 재직자까지 확대
- ✓ 지역 주력산업 기반 중소기업이 선도기업으로 성장 지원하는 법적 기반 마련
- ✓ 민간투자 연계 틈스 방식 R&D 등 중소기업 R&D의 비수도권 지원 확대
- ✓ 창업기업 혁신 성장을 위해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설 추진

04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수출증대 및 안정적인 경영 보장

- ✓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확대와 종합적인 마케팅 역량 강화
- ✓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 위한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추진
- ✓ 중소·벤처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등 혁신 촉진, M&A 방식의 기업승계 활성화
- ✓ 중소기업 재해 보상을 위한 민관 협력의 정책 보험 도입 추진
- ✓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으로 중소기업 자금 접근성 제고·금융기관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유도

05 R&D와 AI 제조 혁신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 공공의 성과가 사업화로 확산되는 한국형 기술이전 사업화 추진
- ✓ '중소기업AI 활용 확산·촉진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의 AI 경쟁력 강화
-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 ✓ 금형·열처리·주조 등 국가핵심 제조뿌리산업 지원 강화

9. 중소벤처기업

06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예산 확대로 대기업 수준의 복지혜택 제공
- ☑ 중소기업 재직자 주택특별공급 지원 확대
- ☑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교통비 지급 및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확대
-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장 및 감면한도 확대 추진

07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명확화
- ☑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거래조건 등 단체협상 요청권 부여
- ☑ 지역 중소기업 정책에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참여 확대

08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 ☑ 「특허법」 등에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제도) 도입하여 입증부담 완화
- ☑ 범부처 협업으로 기술탈취근절 대응단 신설하여 기술보호 제도 개선
-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피해 중소기업 구제 및 지원
- ☑ 기술분쟁 시 증거 활용을 위한 중요자료 원본증명 등 기술임치 제도 활성화
- ☑ 기술탈취 처벌 및 손해배상 강화
- ☑ 중소기업 사이버 보안 강화 및 중소기업 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0. 농어업인

01 농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기후농정과 미래농산업 육성

- ☑ 마을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농어촌 에너지 자립도 제고
- ☑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등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농어촌 RE100 단계적 도입
- ☑ 「식량안보법」 제정으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 품종개발, AI 관측·재해예측 고도화 등 기후적응형 농업 추진
- ☑ 친환경·유기농업 두 배 확대,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농축산업의 저탄소 전환
- ☑ 임업·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산업이자 거점으로 육성
- ☑ 지역푸드플랜 및 로컬푸드 활성화
- ☑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산으로 농식품 생산·유통·소비 혁신
- ☑ 그린바이오·푸드테크·동물용의약품·반려동물연관산업 등 농업을 둘러싼 관련 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 ☑ 전통식품산업 활성화 및 K-푸드산업 혁신성장 지원
- ☑ 농업 과학기술(R&D) 혁신
- ☑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단계적 시행
- ☑ 쌀값 정상화·농산물 유통 개혁·공익직불금 확대 추진
- ☑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및 수입안정보험 도입 등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 마련
- ☑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및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재보험수준으로 강화

10. 농어업인

02 농정여건 개선

- ☑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농업법인 취업 지원제도 도입 등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
- ☑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제도 개선
- ☑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으로 노후 대비 및 영농 세대교체
- ☑ 고령농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하여 청년 등 영농 세대교체
- ☑ 자치분권형 농정 추진 및 스마트농업, 재생에너지 등 지역기반 인재 양성
- ☑ 읍면 거점에 농촌형 생활 SOC 복합센터 확충으로 의료, 돌봄, 생활, 문화, 교통 등 필수 서비스 제공
- ☑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확대, 세컨드하우스 및 귀농·귀촌 지원 강화
- ☑ 농촌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쾌적한 농촌 조성

03 신성장동력 창출 및 어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수산업 육성

- ☑ 한-호주, 한-싱가포르 사전타당성 연구 등 글로벌 녹색항로 확대 추진
- ☑ 암모니아·메탄올 연료공급 실증 및 시범운항 지원 등 녹색기술 연구개발 추진으로 공급망 확대
- ☑ 친환경선박 중심 국가수송력 확충을 위한 국적선사 선박금융 확대
- ☑ 전국 단위 콜드체인 기반 수산물 공급망 구축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식산업 육성
- ☑ K-수산식품 수출 유망 품목(김, 감태 등) 지원 확대
- ☑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지원 및 품목육성을 위한 수산선도조직 육성사업 예산 확대

- ☑ 수산업 전략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 외연 확장 및 (가칭) 김산업 진흥연구원 신설 추진
-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확대
- ☑ 관광객 등 휴식·체류 공간 제공 및 지역 해양관광자원과 시너지 극대화하는 공공 해양관광인프라 조성 지원
- ☑ 어촌문화·관광인프라를 활용한 '체험형 어촌 위케이션 빌리지' 조성
- ☑ 섬 관광객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 어촌 정착자금 지원 확대 등 청년어업인 인력창출을 위한 진입 지원 확대

04 어업 및 어촌 여건 개선

- ☑ 기존의 해안가 쓰레기 모니터링에서 벗어나 드론과 AI를 연계한 전국 단위 해양폐기물 실태조사 실시,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 등 해양오염 분포 대응 및 수거지원 확대
- ☑ 수산자원 대비 과도한 어선세력(기후변화 고영양 업종 중심)을 집중 감축하여 생산성 제고
- ☑ 재해 상습 피해해역을 기후변화 적응해역(관리·특별)으로 지정하고, 자력회복 가능성을 평가하여 회복·폐업 등 지원·관리
- ☑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어업 이상기온 대응대책 마련
- ☑ 여객선 현행 민간위탁 운영 체제 방식에서 공공기관이 책임 운영하는 공공위탁(공영제) 추진
- ☑ 연안여객 안전을 위한 해상 전기차 화재 사전 방지, '연안여객선 소화설비' 예산 확대

11. 동물반려인

☑ 반려동물 보호·의료 및 책임 관리체계 강화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보험 활성화 등을 통한 양육비 부담 완화,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진료소 확대 등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강화
- 지방정부 지원 동물병원, 찾아가는 동물병원 확대 등 인프라 확충 및 중성화수술 지원 확대 등

☑ 비반려동물의 동물복지 수준 제고

- (농장동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확대, 지방정부 공공급식에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사용 확대, 동물복지직불제 도입 등을 통한 농장동물 복지 개선
- (전시동물) 동물원·수족관 동물복지 개선, 공영동물원에 야생동물보호시설 설치
- (실험·봉사동물)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통한 실험동물 희생 최소화, 국가봉사동물 관리체계 확립, 민간입양 지원 확대

☑ 동물복지 법·제도 기반 확립

- 전체 동물을 포괄하는 동물복지 이념과 법적 지위 등을 반영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등

12. 투자자

01 국민성장펀드 적극적 운용

- ☑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의 적극적 운용을 통한 미래전략산업 자금공급 대폭 확대
- ☑ 국민공모 및 연기금·민간 금융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형펀드를 조성하여 기업성공의 과실을 국민들과 공유

02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 ☑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감안한 주식시장 재구조화
- ☑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노력
- ☑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 주식시장 수요 기반 확충 및 기금 수익률 제고

03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

- ☑ 주권상장법인 인수·합병가액 결정 시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 적용
- ☑ 상장회사 지배권 변경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 ☑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일정 물량 이상의 신주인수권 부여

04 먹튀·시세조종 근절을 통한 시장질서 조성

- ☑ 상장법인 임직원·주요주주 등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청구하도록 의무화
- ☑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향조정 및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 도입
- ☑ 사모펀드 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감독장치 마련

05 디지털자산 시장기반 강화

- ☑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기반 조성
- ☑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 단계적 제도화 추진

13. 군인

- ☑ 군복무 중 진로탐색 및 자기개발 지원 강화
- ☑ 예비군 동원훈련(1~4년차) 기간 단축 및 예비군훈련보상비 현실화
- ☑ 장병의 건강 식단 보장 및 군급식의 지역산·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소비 확대
- ☑ 초급 간부 자산 형성 지원 강화
- ☑ 장기근속자에 대한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확대
- ☑ 군무원도 국방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대한민국
국가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